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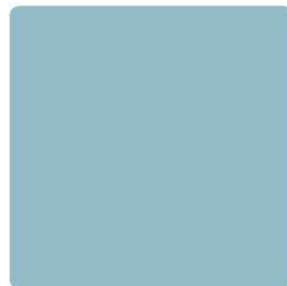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이슈를 집중 분석한  
새사연의 It Book [잇;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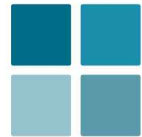
세계경제 침체,  
다양한 대안들



2013년 7월



2013023224692



새사연의 진보적 정책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지적 공유 자산을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새사연 회원으로 참여하여  
진보의 정책 자산을 늘리고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도록 합시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새사연이 도약합니다.



## [잇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 Part 2. 세계경제침체, 다양한 대안들

발행 | 2013년 8월 8일

지은이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펴낸이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주소 | 서울 마포구 독막로 229길 민한빌딩 4층

전화 | (02) 322-4692

팩스 | (02) 322-4693

홈페이지 | <http://saesayon.org>

전자우편 | [edu@saesayon.org](mailto:edu@saesayon.org)



## 여는 글

“올 상반기 경쟁률은...” 새해 벽두가 되면 뉴스 1면을 장식하는 뉴스가 있다. 바로 경쟁성장률. 언론들은 정부 및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경제성장률을 앞다퉈 보도하고, 전문가들은 나름의 전망과 대안을 제시한다. 외환위기 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 보도는 그야말로 장밋빛 미래였다. 가히 한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불릴만큼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고 10%를 훌쩍 넘은 해도 많았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면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국 경제가 이미 역치에 도달한 탓도 있을 것이고 세계화와 금융시장의 자유화, 단기 수익 중심의 기업 경영과 노동 유연화 등 불평등이 심해져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다. 1970, 80년대 세계를 풍미하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의 종말이 온 것이다.

이는 비단 한국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다. 세계 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연합(UN)은 2013년 경제성장률은 2.4%로 전망했다. 지난 3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주류경제학의 방식대로는 더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하다. 누군가의 삶을 저당잡고, 정치발전과 사회발전을 희생시키면서 성장한 경제발전은 이제 멈춰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장기침체와 지속되는 실업률,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전체 사회의 불평등이 다시 경제위기를 촉발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올 4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철의 여인 대처가 죽었다. 일시적으로 영국의 경제 수치는 좋아졌지만 행운도 잠시, 민영화와 긴축정책은 경제는 물론 영국인들의 삶도 지키지 못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경멸했던 대처의 죽음을 일컬어 “마녀가 죽었다!” 라고 하기도 한다. 이렇듯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고 새사연은 그것을 찾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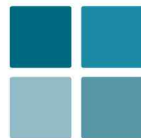
맨큐의 1%를 위한 변론을 비판하면서 주류경제학의 가정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차베스, 아베노믹스, 동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정책을 조망해보고 시장경제와 공공경제가 책임지지 못하는 간극을 채우고 시민들의 힘으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나가는 사회적 경제의 사례를 살펴본다. 위기는 그동안 은폐된 과거를 가시화시키고 성찰의 기회를 줘 새로운 변혁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줄 것이다. 세계 경제 장기 침체 속에서 다양한 대안을 통해 새로운 시선을 갖길 바란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임 경 지



## 목 차

여는 글 .....	3
세계 경제 침체에 가려져 놓쳐서는 안 될 문제들 .....	6
The Post-Crisis Crises, Joseph E. Stiglitz	
루비니 교수가 말하는 2013년 경제의 5대 위험 .....	11
The Economic Fundamentals of 2013, Nouriel Roubini	
자신의 국민과 싸운 ‘철의 여인’ 대처 .....	16
Thatcherism's Bellicose Soul, Robert Skidelsky	
맨큐의 1%를 위한 변론 .....	21
Greg Mankiw and the Gatsby Curve, Paul Krugman	
재정 긴축을 놓고 충돌하는 세계 .....	26
When Is Government Debt Risky?, J. Bradford DeLong	
Who's Afraid of the Big Bad Debt?, Ricardo Housmann	
아베노믹스, 디플레이션, 그리고 고령화 .....	34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가 평가하는 차베스 .....	48
Latin America After Chavez, Luiz Inacio Lula da Silva	



동아시아 산업정책 경험과 아프리카의 발전 .....	53
East Asia' s Lessons for Africa, Joseph E. Stiglitz	
주민들의 건물 공동소유로 높은 임대료 극복하기 .....	60
Community ownership of public buildings, Andrew Bibby	
퀘벡 상티에 2006년 선언, “사회적 경제는 올랐다!” .....	66
퀘벡 사회적 연대 경제 대표회담 2006년 선언(2006 DECLARATION), 사회적 연대 경제 대표회담	



---

## 세계 경제 침체에 가려져 놓쳐서는 안 될 문제들

The Post-Crisis Crises, Joseph E. Stiglitz

2013.01.11 |

이수연\_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mailto:soo@saesayon.org)

---



▶ 역자의 글 ◀

2013년이 밝았다. 하지만 밝아오지 않은 세계 경제가 마음을 무겁게 한다. 사실 언제 밝아올지 예측하기도 힘든 상태이다. UN은 2.4%로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면서, 각 국의 경제정책이 잘 작동할 경우 3.8%까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0.2%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경제는 어떨까? 정부는 3% 성장을 예상했지만, 아마 2.5%대에 그칠 것이다. 세계 경제의 영향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세계 각 국 정부의 최대 목표는 이 침체를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이다. 새로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과제도 경제 회복, 경제 안정이다. 새로운 세대투표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된 50대 유권자들이 박근혜 정부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도 그나마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었다고 이야기된다.

그런데 스티글리츠 교수는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기고한 "위기 이후의 위기들"이라는 글에서, 우리가 더 큰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경제 침체보다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이며, 더 위협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지구 온난화, 사회구조의 변화, 세계불균형, 불평등 심화이다. 위대한 학자가 가질 수 있는 거대한 시야이다. 스티글리츠가 제시한 진짜 중요한 문제들에 비하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걱정 따위는 근시안적이다.

그렇다고 경제 문제가 하찮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스티글리츠의 의도도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경제문제에만 집중하느라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거나 혹은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해결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구온난화, 사회구조의 변화, 세계 불균형, 불평등 심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경제침체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도 경제성장에 급급해 근시안적 대책을 내놓지 않아야 한다.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라는 우리 사회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경제회복과 성장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방향은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이다.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을 제한하여, 더 많은 경제주체들에게 기회를 주고, 노동권을 강화하고, 복지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여야 한다. 그것이 '뒷탈'없는 경제성장으로 가는 길이다.





## 위기 이후의 위기들 (The Post-Crisis Crises)

2013년 1월 7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유로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때문에 세계 경제의 장기적 문제들이 간과되고 있다.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느라 이 문제들은 더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를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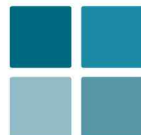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구온난화이다. 세계 경제 성장의 악화는 탄소배출 증가를 늦추겠지만, 이는 그저 짧은 유예기간을 얻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우리는 세계의 온도를 고작 섭씨 2도 낮춘다는 제한된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매우 느리게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갈 경우 미래에는 탄소 배출의 급격한 축소가 요구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경제 침체 상황에서 지구온난화는 나중 문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반대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세계 경제를 개선하는 것이 총수요와 성장을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동시에 기술적 진보와 세계화의 흐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급격한 구조 변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트라우마를 유발할 정도로 충격적일 수 있으며, 시장은 이런 충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농촌의 농업 경제로부터 도시의 제조업 경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처럼, 오늘의 문제도 일정 정도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탄생해야 하는데, 현대 금융시장은 새로운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투자와 착취를 선택했다.

또한 구조적 변화를 만드는 과정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요구한다. 현재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 중에는 건강과 교육이 있는데, 이 두 분야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시장 불완전성을 근본적 특징으로 갖고 있으며 평등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이다.



2008년 위기 이전부터 세계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었다. 독일과 중국 등 무역수지 흑자 국가들이 소비를 늘려야 한다.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실제 유로 위기가 일어난 이유 중 하나는 독일이 수출을 통해 장기간 쌓인 흑자를 처리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무역흑자는 GDP 대비 비중으로 보았을 때 줄어들고 있으나 장기 추세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국내 저축이 늘어나고 세계 통화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국내 저축 상황은 좋지 않아 경제 침체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아마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소비를 늘린다고 해도 반드시 미국 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와 교육 같은 비무역재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공급 체인의 심각한 불안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중국 수출제조업자에게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국가들에게 그렇다.

마지막으로 불평등 속에 세계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빈곤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함께소득 상위 집단이 점점 더 많은 경제 성과를 가져갈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중산층이 공유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미국에서 기회의 평등은 이제 신화가 되었다.

대침체(Great Recession)가 불평등의 추세를 악화시켰지만, 대침체가 있기 이전부터 이미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였다. 실제로 나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불평등의 심화가 경제 침체의 이유 중 하나이며, 세계 경제에 관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구조변화가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다.

대다수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경제, 정치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이 상태로라면 영국에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고, 사회 제도나 체제는 그 권위를 의심 받게 될 것이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의 격차가 지난 30년 동안 대단히 좁혀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빈곤상태에 있으며, 저개발국가와 그 외 국가 사이의 격차는 아주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다.

국가 간 격차에 관해서는 불공정한 무역 협정도 문제이다. 농업 보조금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것은 가난한 국가의 많은 이들의 소득이 농업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정의롭지 못하다. 선진국은 친개발무역체제를 창출하기 위해 2001년 11월 도하에서 맺은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빈곤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2005년 글렌이글스 G8 정상회의에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시장은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풀 수 없다. 지구 온난화는 본질적으로 "공공재" 문제이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구조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가 더 많은 행동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재정감축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 때에 더욱 필요하다.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발생할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재정적자를 격렬히 반대하고 긴축정책을 옹호하는 자들의 주장은 오늘의 경제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미래의 전망도 어렵게 만든다. 이런 모순은 총수요 부족과 함께 오늘날 세계 경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대안은 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자. 지구온난화, 세계 불평등과 빈곤,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동시에 추구할 때 우리들 자신을 구제할 수 있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global-warming-inequality--and-structural-change-by-joseph-e--stiglitz>



---

## 루비니 교수가 말하는 2013년 경제의 5대 위험

The Economic Fundamentals of 2013, Nouriel Roubini

2013.01.27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naver.com

---

이 모든 위험들이 최악의 형태로 현실화되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가능성은 낮지만, 그들 위험 하나 하나만으로도 글로벌 경제를 멈춰 세우기에 충분하고 침체로 몰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들 위험들이 모두 극단적인 형태로 현실화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각각은 일정한 형태로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하게 될 것이다. 2013년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힘을 얻고 있다.



▶ 역자의 글 ◀

2013년 경제는 어떻게 될까. 모든 국민들의 근심사항이다. 작년에 우리 경제는 2%밖에 성장을 못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던 시기와 비슷하다. 작년에는 특별한 경제적 사건이나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가계부채 증가나 부동산 경기 부진은 이전부터 계속되던 추세가 이어진 것일 뿐 대규모 폭락사태 같은 것은 없었다.

대외적 환경도 마찬가지다. 2010년부터 수면위로 올라온 유럽위기는 작년에도 계속되었고 미국의 경기 부진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성장세가 다소 꺾여 7%까지 떨어진 것도 예상 못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정부를 포함한 모든 기관들이 당초에 지난해 성장률이 3.7%쯤 된다고 보았다.(새사연은 2%중반대로 예상했다.) 그런데 거의 예상치의 절반밖에 안 되는 2%의 성장이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미세하게 개선된 2% 후반 수준의 성장을 한다고 예상들을 하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도 비슷하게 3% 초반 수준을 전망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세계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작년부터 세계성장률 이하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도대체 왜 경기가 이토록 오랫동안 호전되지 않는 것일까? 정말 올해는 그나마 작년보다 더 악화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는 있는 것일까?

작년보다 올해 경제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요인도 상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지금 소개하는 루비니 교수의 경제 전망이 대표적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뉴욕대학 경제학 교수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올해 세계경제의 다섯 가지 위험요인을 지목했다. 1) 올해 연초 미국 재정절벽 합의는 임시적이고 제한된 합의여서 위험이 아직 남아있고, 최근의 주식시장 회복도 중앙은행의 비정상적인 양적완화 탓이지 실물기초의 건강한 회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2) 유럽은 지난해 최악의 위험을 피하기는 했지만, 통화 동맹의 근본문제는 여전히 하반기 이후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다.

3) 수출과 정부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중국경제도 민간소비 비중의 확대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아 올해 말경 경착륙 위험이 있다.(대부분의 학자들이나 기관들이 중국의 경착륙 위험을 낮게 보는데 비해 루비니 교수는 시종일관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4) 신흥국들의 성장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5)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을 비롯해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석유가격 상승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여전하다.

물론 루비니 교수는 이들 다섯 가지 위험이 모두 폭발하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낮게 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어쨌거나 루비니 교수의 전망이나 위험요인 진단에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적어도 그가 지목하는 다섯 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분석해보고 이후 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2013년 경제의 기초 (The Economic Fundamentals of 2013)

2013년 1월 21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올해의 글로벌 경제는 2012년을 지배했던 상황들과 몇 가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놀랄 것도 없지만, 세계경제는 1년 더 평균 3%정도의 성장을 할 것인데, 선진국은 연평균 1%대의 평균 이하의 성장을 할 것이고, 신흥시장은 5%대의 성장을 하는 등 회복속도는 다를 것이다. 1년 전과 비교해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또한 있을 것이다.

부채를 축소시키기 위해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고통스런 디레버리지(deleveraging) 과정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올해도 계속될 것인데, 이는 선진국 경제성장이 느리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재정 긴축은 유로존 주변국과 영국을 넘어서 올해 대부분 선진국 경제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긴축은 (일본을 제외하면) 유로존 핵심 국가들, 미국, 그리고 나머지 선진국들로 확대되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 경제가 동시적인 재정긴축에 들어가면서 1년 더 성장세가 좋지 않게 될 것이며 일부 국가들에서는 본격적인 경기위축에 몰리게 될 수도 있다.

선진국의 허약한 성장 동력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위험자산의 랠리는 경제



기초의 개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새롭게 시작된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 미국 연준, 영란은행, 스위스 국가은행 등 대부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일련의 양적완화에 개입했고, 새로 출범한 일본이 아베 내각이 더욱 관례적이지 않은 정책 방향으로 밀고 나감에 따라 일본 중앙은행이 가세하게 되었다.

나아가 몇 가지 위험 요인들이 앞에 놓여있다. 첫째, 연초 미국의 세제합의(mini deal on taxes)는 재정절벽을 완전히 해결한 것이 아니었다. 조만간 채무한도와 의회의 지출결의안 등을 가지고 추한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시장은 또 다른 재정절벽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사실 연초의 세제 합의조차 GDP의 1.4%에 해당하는 상당한 양의 재정축소였다.

둘째로, 유럽중앙은행의 행동(2012년 9월 3년 만기 국채의 무제한 매입을 포함한 양적완화 - 역자)은 그리스가 유로에서 탈퇴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금융시장 접근을 차단당하는 것과 같은 테일 리스크(tail risk;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투자 포트폴리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 - 역자)를 줄이긴 했지만 통화동맹의 근본 문제를 해소한 것은 아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함께, 유로존의 위험은 하반기 경에 다시 강력하게 등장할 것이다.

결국, 과도한 긴축과 강한 유로화, 계속되는 신용위축으로 인해 악화된 불경기(stagnation)와 현저한 침체는 유럽의 어려움을 지속시킬 것이다. 그 결과, 지속 불가능한 거대한 사적, 공적 부채는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환경 아래에서 경쟁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구조개혁이 부재하기 때문에 잠재적 생산능력이 훼손될 것이다.

셋째로, 중국은 과도한 수출과 고정투자, 높은 저축, 그리고 낮은 민간소비에 기초한 불균형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성장모델을 떠받치기 위해 새로운 통화, 재정, 신용자금 정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올해 하반기 경 과도한 투자는 부동산과 사회간접시설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산업생산 능력은 과잉될 것이다. 보수적이고 점진적이며 합의를 중시하는 중국의 새 지도부는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예비적 저축을 줄이는데 필요한 개혁을 가속화할 것처럼 보이지 않으므로, GDP에서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빠르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경착륙 위험은 올해 말쯤에 커질 수 있다.

넷째로, BRICs를 포함하여 수많은 신흥시장들은 지금 성장 속도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고 있다. 그들의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 - 거대 국유기업, 거대 국유은행, 자원 민족주의, 수입대체 산업화, 금융 보호주의, 그리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통제 -는 중심적인 문제다. 경제 성장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고양시키기 위한 개혁을 그들이 해낼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지정학적 위험도 여전히 크다. 북 아프리카에서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이르기까지 중동 전체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 정말로 아랍의 봄(2011년 이후 아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시위 - 역자)이 아랍의 겨울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한 편으로 하고 이란을 다른 편으로 하는 심각한 군사적 충돌가능성은 여전히 낮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협상과 제제가 이란 지도자들로 하여금 핵개발 노력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란의 핵무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인내심은 점점 더 한계에 이르고 있고 실제적 전쟁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석유시장에서 공포가 확산되면 석유가격은 20%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 일본과 중국, 인도, 그리고 다른 모든 선진국들과 석유 순수입 신흥국가들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 모든 위험들이 최악의 형태로 현실화되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가능성은 낮지만, 그들 위험 하나 하나만으로도 글로벌 경제를 멈춰 세우기에 충분하고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 위험들이 모두 극단적인 형태로 현실화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각각은 일정한 형태로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하게 될 것이다. 2013년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힘을 얻고 있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inequality.is/>

<http://www.people.hbs.edu/mnorton/norton%20ariely%20in%20press.pdf>

<http://www.fastcoexist.com/1681517/this-viral-video-will-change-how-you-think-about-wealth-distribution-in-the-us>





---

## 자신의 국민과 싸운 ‘철의 여인’ 대처

Thatcherism's Bellicose Soul, Robert Skidelsky

2013.04.30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naver.com

---

대처는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보여준 결정적 지도력 덕분에 ‘철의 여인’ 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사실 대처가 벌인 대부분의 싸움은 국내에서 자기 국민들과 벌인 것이다. 대처가 1984~1985년 광부파업을 분쇄하면서 자기나라의 광부가 적이 된 사례가 그것이다.



▶ 역자의 글 ◀

지금은 한 시대가 바뀌는 국면이다.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시대다. 그리고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정치가 마가릿 대처다. 지난 4월 8일 사망하면서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마가릿 대처는 1979년에서 1990년까지 연속 3선으로 영국총리를 역임하면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과 함께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시대를 연 보수적인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집권 시절에는 물론이고 사망 후인 지금도 사람들에게 지지와 비판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통화안정에 힘쓰고, 세금과 정부지출을 줄여야 한다. 법인세와 준조세를 줄이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기업이 활동하기에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민영화 확대해야 하고,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키며 노동 유연성을 늘려야 한다.” 는 대처의 주장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원형을 보여준다. 어쨌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세계경제 침체는 대처와 레이건에 의해 시작된 한 시대의 마감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온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케인스 전기를 써서 유명해진 로버트 스킨델스키가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대처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짧지만 종합적으로 대처 시대를 요약하고, 대처가 남긴 잘못된 유산들을 짚어준다는 점에서 유익한 내용을 제공해주고 있다.

대처의 호전적인 영혼  
(Thatcherism's Bellicose Soul)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2013년 4월 17일

로버트 스킨델스키(Robert Skidelsky)

마가릿 대처는 20세기 평화의 시기에 영국의 가장 위대한 총리였다. 동유럽 공산주의와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위기가 거의 동시에 도래했던 1980년대에 대처는 위대한 공적을 쌓을 기회를 잡게 된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큰 업적을 이루자면 강력한 리더가



필요했다.

소비에트 지도자 고르바초프와 대처의 우호적 관계는 냉전을 끝내는 길을 열게 된다. 그녀의 사유화 정책(privatization policies)은 어떻게 국가사회주의를 해체할 수 있는지를 세계에 보여주었다.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부활은 언제나 레이건-대처 혁명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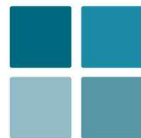
대처는 또한 똑 같은 정책에 대해 찬사와 반대가 극명하게 나뉘는, 현대 영국 수상 가운데 가장 분열적인 정치인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정확히 표현한 것처럼 ‘신념의 정치인(conviction politician)’이었다. 확신이란 논쟁을 용납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다. 그녀는 일부러 타협하려 하지도 않고 대신에 정치적 세계를 ‘우리 ‘와’ 그들 ‘로 나누었다. 아시시(Assisi)의 성 프란시스를 인용하면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실을 가져오면 된다” 고 총리관저 앞에서 선언했다.

"승리에는 아량이 필요하다 “ 윈스턴 처칠의 충고다. 대처는 용감하고 단호했지만 아량이라곤 없었다. 그녀는 유명한 승리자가 되었지만 말과 행동 모두에서 패자에 대한 관용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 결과 분쟁 속에서 화합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녀의 사명은 편협한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천성적으로 그녀는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의 추종자였다. 하이에크나 대처에게 있어서 20세기의 가장 큰 지적 오류는 국가가 개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국민의 상태를 증진시키는데 국가의 역할이 있다고 보았다면, 대처는 (국가의 개입이) 노예의 길로 서서히 빠져드는 것으로 인식했다. 대처의 이러한 메시지가 동유럽에 어떻게 퍼졌는지를 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처 방식의 역사해석에 따르면 영국의 경기침체를 초래했던 사회주의와 관료주의, 그리고 노동조합의 수중으로부터 부의 창조를 위한 자극을 풀어주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이전에 스스로를 돕기 때문에 칭찬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부흥을 위한 대처의 편협한 프로그램은 유럽대륙의 좀 더 규제적인 접근법과 그녀의 차이를 점점 더 벌어지게 했다. 1988년 벨기에 브뤼헤(Bruges)에서 ‘영국과 유럽’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며 그녀는 소리쳤다. “브뤼셀에 있는 유럽의 초국가가 지배를 다시 강화하는 것을 보려고 영국에서 국가의 국경을 봉쇄한 것이 아니다” 대처는 유럽경제공동체(EEC)가 단일 시장 완성보다 초국가적인 연방주의적 방향으로 나간다고 확신하면서 이런 경향에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대처는 유럽 공동체의 초국가 기구가 점차 정책권한을 확대해 주권 국가들 대신 각국 정부들에게 간섭한다고 생각한 것



이다. 대처는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애매한 상태로 내버려두었고 이후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다.

물론, 여타의 약삭빠른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대처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어떤 것인지, 보류를 해야 하는 싸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중재에 도달하기 위해서 항상 싸워 이기는 것을 선호했다. 그녀는 포클랜드 전쟁(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서 보여준 결정적 지도력 덕분에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대처가 벌인 대부분의 싸움은 국내에서 자기 국민들과 벌인 것이다. 대처가 1984~1985년 광부파업을 분쇄하면서 자기나라의 광부가 적이 되었고, 1986년에 그녀가 폐지한 런던지방자치단체(Greater London Council)가 적이 되었다.

대처는 자신이 잡화상 딸이라는 초라한 신분임을 중시했고 영국의 도덕적 경제적 추락을 불러온 기득권층을 싫어했다. 그녀는 중, 서민층을 이해했고 그들과 물질적 열망이나 도덕적 편견을 공유했다. 임대주택을 싼 값에 매각하여 출세 지향적 노동자층에게 보상을 해주기도 했다. 그리고 대처가 가장 성공적인 여성 정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페미니즘을 ‘독’으로 간주했고 그녀를 추종하는 여성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1970년대의 점증하는 산업적 혼란에 대한 대처의 대답은 인플레이션을 끝장낼 ‘통화주의’ 이었고,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제재였으며, 비대한 공기업의 사유화였다. 이 세 가지 정책의 목표는 모두 국가의 권위와 경제적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북해유전 덕택에 대처는 영국의 상대적 경기하락을 반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승리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는데, 1984년에 실업률이 1930년대 이래 최고 수준인 12%(3백만 명)까지 올랐던 것이다. 선진국에서 성장세를 다시 만들어낸 대처주의는 사실 미래를 담보로 한 것이었다. 새로운 경제는 금융과 세대를 뛰어넘는 쇼핑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많은 영국인들이 대처를 존경하기는 했지만, 대처의 정책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하지는 않았다. 그녀가 세 번의 선거에서 연승했지만 보수당은 선거에서 43%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이는 보수당 지도자들인 처칠과 앤서니 이든, 그리고 맥밀리언이 1950년대에 받은 지지보다 낮은 것이다. 그녀의 재임기간 137개월 중에서 5개월 정도만 국정 지지율이 50%를 넘었을 뿐이다.

사실 경제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대처의 재임 기간 중 대처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나중에 그의 선교적 열정은 무시되었다. 대처의 권력은 야당의 분열과 소선거구제도 때문에 유지되는 측면도 있었다.



대처는 자신이 정치적 프로젝트를 요약하여 제안했다. “경제학은 수단이다. 목적은 영혼을 바꾸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대처의 성과측정 기준이라면 그녀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대처리즘은 실패했다.

대처가 촉진시켰던 경제의 금융화는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구매권(right to buy)' 정책(공공주택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을 매우 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종의 주택 민영화 정책)은 주택가격의 상승적 악순환을 초래했고, 가계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빚을 지도록 부추겼다. 금융규제완화를 추진한 1986년 '빅뱅(Big Bang)'은 런던의 금융가 시티(the City)에 위험한 투자 행위들을 일반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개혁들은 모두 2008년 금융위기의 씨를 뿌린 셈이 되었다.

대처가 조성하려고 했던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가치“(근면, 자존, 검약, 이웃과의 친교 등 대처가 강조하고 보수당 강령에까지 집어넣은 가치들)는 대처 집권이 초래한 물질적 부에 대한 무제한 추구하고 충돌했다. 대처가 건설하려고 했던 ’ 건전한 개인이익 추구에 기초한 도덕적 사회 ‘는 조악한 자존심에 기초한 탐욕스런 사회로 변질되었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margaret-thatcher-s-polarizing-politics-by-robert-skidelsky>



---

## 맨큐의 1%를 위한 변론

Greg Mankiw and the Gatsby Curve, The NewYork Times

2013.06.25 |

여경훈\_새사연 연구원 | khyeo@saesayon.org

---

CEO들에게 높은 보수를 주는 사회적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1980년대보다 몇 배 높은 보수를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때보다 더 나은 경영성과, 더 나은 생산적 혁신을 보고 있는가?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가? 생활수준이 더 빨리 나아지고 있는가? No, no, no and no. ... 상위1%의 노동이 생산한 사회적 가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구조적 원인으로 불평등은 증가하고 있다. - The Economist.



▶ 역자의 글 ◀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당대 최고 히트를 친 경제학 교과서를 집필한 맨큐는 2003부터 2005년까지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역임했고, 2006년부터 지난 해 대선까지 공화당 롬니 후보의 경제 고문 역할을 수행하였다. 뼈 속까지 공화당원인 보수주의자다.

심상치 않은 제목과 달리 실제 논문은 별반 새로울 것이 없다. 그 논문의 핵심은 통상적인 보수주의자들의 익숙한 주장들의 반복에 불과하다. 1%가 높은 소득을 받는 것은 그들의 우수한 기술과 숙련으로 높은 한계생산성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경제학 원론의 바로 그 내용이다. 즉 그들은 기여한 만큼의 보수를 받기에 경제적 효율성에 따르면 좌파의 주장의 달리 하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미국의 좌파 학자들이 비판을 가하면서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맨큐가 논문에서 스티글리츠의 2012년 저서,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를 “체계적 증거라기보다는 설교나 개인적 일화에 근거하고 있다”고 혹평했으니 스티글리츠도 논쟁에 가담할지 두고 볼 일이다. 그리고 경제학 논쟁에는 결코 빠지지 않으려 하는, 크루그먼도 뉴욕타임즈 칼럼을 통해 여기에 가세하였다. 아래는 크루그먼의 칼럼을 중심으로 맨큐 논문에 대한 간략한 비판을 소개한다.



비판\_그레고리 맨큐와 게츠비 곡선  
(Greg Mankiw and the Gatsby Curve)

2013년 6월22일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크루그먼에 따르면, 맨큐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한다.

첫째,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베이커(Dean Baker) 소장의 비판이다. 그 내용은 1%가 받는 천문학적인 보상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작동의 결과라기보다는 정부에 의한 정책 선택의 결과” 라는 주장이다. 즉 맨큐가 예로 든 애플의 잡스나 해리포터의 롤링이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재산은 특허권, 저작권 등 정부가 개입한 독점의 부산물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과거 저작권은 14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정부의 개입으로 95년까지 늘어났는데, 만약 50% 정도 줄어든다면 독점으로 인한 이득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시카고 대학에서 의료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헤롤드 폴락(Harold Pollack)의 비판이다. 그는 맨큐는 논문에서 기회의 균등을 거론하며 다음과 같은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였다.

*“상위1%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는 중산층 자녀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적 경험으로 형성되었다. 나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 우리 부모들은 대학 졸업자가 아니었다. 우리 자녀들은 더 많은 돈과 교육을 받은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내가 살던 그때보다 더 나은 교육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폴락 교수는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한 논문을 인용하며 맨큐의 경험을 실증적으로 비판하였다. 1979~2000년 기간, 상위20%에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상위20%에 남을 확률이 55%이고, 단지 11%만이 하위40%로 하락하였다. 반면 중산층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상위20%로 올라갈 확률은 13%, 하위40%로 떨어질 확률은 31%였다.

또한 하버드 크림슨(Harvard Crimson, 미국 하버드 대학 커뮤니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 학부생의 45.6%는 부모의 연소득이 20만 달러를 초과하였다. 연소득 20만 달러는 상위 3.8%에 해당한다. 반면 하위60% 부모 밑에서 자란 학부생은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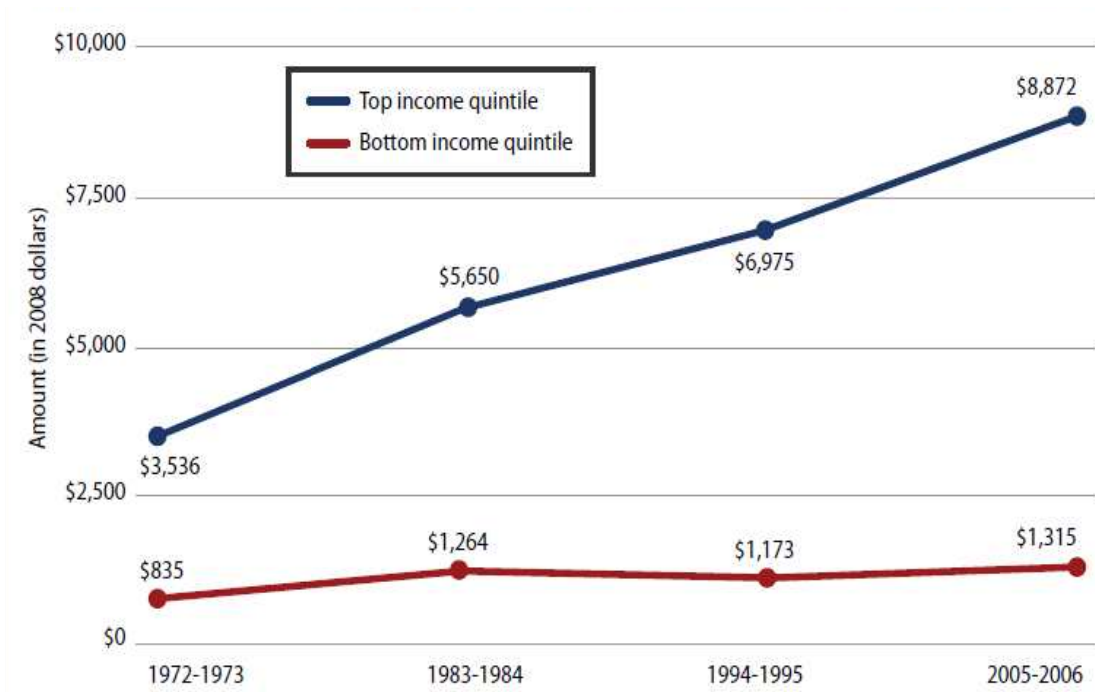


18%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미국 상위 146개 대학의 학부생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74%는 부모의 연소득이 상위25%에 속했으며, 10%만이 하위50%에 속하였다.

소득불평등의 대물림을 주장하는 연구에 맨큐는 논문에서 우성학적 주장을 펼치는 과감함도 주저하지 않았다.

“특히 부모와 자녀는 유전자를 공유한다. 이것은 기회가 균등한 세계에서조차 세대 간 소득 ‘불평등’ 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Q는 상당한 정도로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 똑똑한 부모들이 똑똑한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높은 지능은 평균적으로 높은 소득에 반영된다. 물론 아이큐가 재능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통제력·집중력·대인 관계와 같은 다른 능력들도 마찬가지로 유전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1] 미국의 소득 분위별 자녀에 대한 지출 비용의 변화



인용: Corak(2012), How to Slide Down the ‘Great Gatsby Curve’

유전적 영향은 동일 시점에서 교육적 성과의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왜 1970년대와 2000년대에 유전적 영향이 상이한 경제적 결과를 차이를 초래하는지 설명할 수는 없다. 위 그림은 상위20%와 하위20%가 자녀에게 지출하는 비용의 차이를 시대별로 비교한 그림이다. 맨큐가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인 1970년대 중반만 해도, 부모가 자녀에게 지출한 비용의 차이는 약 4배에 달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이 대



학에 입학했을 무렵인 2000년대에 그 격차는 6.7배로 증가하였다.

세 번째 비판은 이코노미스트의 따끔한 비판이다. “1%는 더 나은 변론자가 필요하다 (The 1 Percent needs better defenders).” 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코노미스트와 같은 보수적인 잡지에서조차도 맨큐와 같은 부실한 논리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일부만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CEO들에게 높은 보수를 주는 사회적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열심히 일하라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그들은 1980년대에 그들의 전임자들이 받았던 보수의 두 배를 받고 있다. 과연 우리는 그때보다 더 나은 경영성과를 보고 있는가? 의료 기술 또는 상업용 부동산 등에서 더 나은 생산적 혁신을 보고 있는가? 우리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활수준이 더 빨리 나아지고 있는가? No, no, no and no. 계급으로서 지금의 CEO들이 한 세대 전 전임자들이 벌었던 것의 몇 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공공의 이익이 달성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 상위1%의 노동이 생산한 사회적 가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구조적 원인으로 불평등은 증가하고 있다.”

\* 원문 게재 사이트:

- <http://krugman.blogs.nytimes.com/2013/06/22/greg-mankiw-and-the-gats-by-curve/>
- [http://www.cepr.net/index.php/blogs/beat-the-press/the-bigger-problem-with-mankiws-plan-to-give-everything-to-the-one-percent?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beat\\_the\\_press+%28Beat+the+Press%29](http://www.cepr.net/index.php/blogs/beat-the-press/the-bigger-problem-with-mankiws-plan-to-give-everything-to-the-one-percent?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beat_the_press+%28Beat+the+Press%29)
-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wonkblog/wp/2013/06/21/the-complacency-of-the-meritocrats/?wprss=rss\\_ezra-klein](http://www.washingtonpost.com/blogs/wonkblog/wp/2013/06/21/the-complacency-of-the-meritocrats/?wprss=rss_ezra-klein)
- <http://www.economist.com/blogs/democracyinamerica/2013/06/inequality?spc=scode&spv=xm&ah=9d7f7ab945510a56fa6d37c30b6f1709>



---

## 재정 긴축을 놓고 충돌하는 세계

When Is Government Debt Risky?, J. Bradford DeLong  
Who's Afraid of the Big Bad Debt?, Ricardo Housmann

2013.05.07 |

이수연\_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mailto:soo@saesayon.org)

---

경기침체기에는 정부 부채가 늘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VS 경기침체기라고 해서 정부 부채의 수준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특히 신흥국은 부채에서 외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위험하다.



▶ 역자의 글 ◀

세계 경제 정책의 향방을 놓고 벌어지는 대토론

재정 긴축이냐, 아니면 성장이냐? 빚을 먼저 줄어야 하느냐, 아니면 경기부양부터 해야 하느냐? 2008년 금융위기로 온 세계가 침체에 빠진 후 지금까지 세계 경제 정책의 향방을 놓고 제기되는 주요 화두이다. 특히 요즘 다시 그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실 정치와 학계에서 모두 재정 긴축을 주장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의 대결이 팽팽해지고 있다.

현실 정치에서는 특히 유럽 쪽에서 의견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2012년 3월 유럽은 신재정협약을 통해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로 줄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동맹을 맺었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는 이를 지키기 힘들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 1년 동안 긴축정책으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은 재정 긴축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유럽연합의 경제 정책에 관한 입장 차이가 어떻게 귀결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학계의 경우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라인하트(Carmen Reinhart) 교수와 하버드 대학의 로고프(Kenneth Rogoff) 교수가 재정긴축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대표적인 학자였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논문에 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큰 사건이 있었다.<sup>1)</sup> 긴축을 반대하는 학자로는 노벨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 클린턴 행정부 출신의 브래드포드 드롱(Bradford DeLong),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 로라 타이슨(Laura Tyson) 등의 석학들과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의 마틴 울프(Martin Wolf)도 같은 입장을 강력히 피력해왔다.

학계의 논쟁은 현실 정치와도 밀접하게 이어진다. 유럽과 미국에서 재정 긴축을 주장했던 많은 정치가들이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들의 논문이 오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재정 긴축을 철회하라는 정치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 여경훈(2013), 전 세계를 속인 엑셀 불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라인하트와 로고프 논문의 오류를 두고 나타난 상반된 견해

과연 무엇이 답일까? 답이 있다면 모든 국가에게 적절한 것일까? 나아가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편의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루 차이를 두고 발표된 두 글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함께 읽기에 흥미로울 것이다.

첫 번째는 미국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장관 차관보를 지냈고 미국경제연구소(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연구원이며 캘리포니아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인 브래드포드 드룽의 글이다. 우선 그는 레인하트와 로고프의 논문을 비판한다.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성장률이 줄어드는 경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레인하트와 로고프의 주장대로 GDP 대비 90%가 중요한 기점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기에는 정부 부채가 늘어나도 아무런 위험도 가져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금리가 높아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고, 주식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 한 부채가 늘어나도 상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의 전 개발계획부 장관이자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수석 연구원이며, 하버드 대학교의국제개발센터 교수인 리카르도 하우스만(Ricardo Hausmann)의 글이다. 그는 레인하트와 로고프의 논문에 실수가 있었을지 몰라도, 그 논문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고 옹호한다. 또한 경기침체기라고 해서 정부 부채의 수준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특히 신흥국의 경우 부채에서 외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재정 긴축자들의 주장은 지금의 미국 현실에서는 맞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그 외 대부분의 국가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비판한다.



## 정부 부채는 언제 위험해지는가? (When Is Government Debt Risky?)

2013년 4월 29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브래드포드 드롱(J. Bradford DeLong)

지출을 감당할 만큼의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정부는 결국 부채로 인해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 국가의 명목 이자율은 올라가고, 채권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기업가들은 법인세가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몸을 낮춘 채 기업의 부를 빼돌릴 궁리를 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정책 불확실성은 심해지고, 사회적으로 비생산적인 투자가 일어나면서 실질 이자율도 올라갈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확실해지면, 노동 분업이 위축될 것이다. 예전에는 가벼운 금전관계로 연결되어 있던 거대한 관계들이 개인적 신뢰나 사회적 제약 등에 의해 연결된 작은 네트워크로 세분화될 것이다. 노동 분업의 범위가 작아지는 것은 생산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정부가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세입을 확보하지 못하면, 위와 같은 일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때도 그러할까? 나와 다른 경제학자들 - 래리 서머스와 로라 타이슨, 폴 크루그먼 등 - 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주식시장이 활황이라면, 기업가들은 정책의 불확실성이나 세금 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금리가 낮다면, 공공부문 투자를 감축해야 한다는 압박도 줄어든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과도한 부채는 디레버리징을 돕고 통화의 유통속도를 높여서 가치의 축적을 가져오고, 예금자들이 밤잠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경제가 되살아나도록 한다.

간략히 말해 경제학자들은 단지 수량, 즉 정부 부채의 양에만 집중해서는 안되며 그것의 가격(역주 : 부채가 발생할 때 감수해야 할 비용)도 살펴야 한다. 채권 거래는 사람들이 상품, 현금, 주식을 구하는 과정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정부 부채의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명목 이자율, 주식시장의 수준이 된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은 현재 모두 좋은 상태로, 시장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부채를 바라고 있다.

라인하트와 로고프는 “부채 시기의 성장(Growth in a Time of Debt)” 이라는 그들의 유명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막대한 재정적자와 거대 은행에 대



한 구제금융은 침체를 막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정부 부채가 장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사회 보험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라인하트와 로고프는 “GDP의 90%가 공공 부채의 문턱” 이라고 표현하며, 그 문턱을 넘으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성장률이 떨어진다.” 고 보았다.

라인하트와 로고프가 그들의 분석에서 저지른 주된 실수는 ‘문턱’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문턱이라는 언어의 선택은 그들이 제시한 그래프와 함께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역주 : 재정 긴축 반대자들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예산 적자와 정부부채를 두고 “걱정하지 말고, 기뻐해라(Don't worry, be happy)” 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 배경에는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학자들이 문턱이라고 말한 90%를 지켜야 한다” 는 내용이 깔려 있다.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부터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가 없다. “부채 시기의 성장” 의 내용은 유럽위원회의 올리 렌(Olli Rehn)과 많은 이들이 “정부 부채가 GDP의 80~90%에 도달하면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 는 잘못된 주장을 하도록 만들었다.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연구는 많은 이들이 믿는 것처럼 GDP 대비 부채가 90% 이하이면 경제가 안전하지만, 90%를 넘게 되면 성장은 위협에 빠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문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인하트와 로고프가 모수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90%가 하위 그룹에 속하도록 데이터를 4개로 구분하였다. (역주 : 드롱은 부채 비율에 따라 50% 미만, 50~100%, 100~150%, 150~200%의 그룹으로 나누어 재분석하였다.<sup>2)</sup>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논문은 부채 비율 30%에서 90%까지만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GDP 대비 부채가 증가할수록 성장률은 점차적으로 완만하게 줄어들었다. 80%와 100%의 차이는 매우 미미했다.

라인하트와 로고프는 높은 부채와 낮은 성장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부채가 위협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조사해야 하는 신호라고 말한다. 어떤 경우는 그럴 수 있다. 부채와 성장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국가들 중 일부는 이자율이 높아지고 주식시장이 하락 중인 상황이었다. 이들은 GDP 대비 부채가 높았으며 실제로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2) 자세한 내용은 브래드포드 드롱의 "부채의 위험 :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연구에서 진짜 문제는?(risks of Debt : The Real Flaw in Reinhart-Rogoff?)"에 나와 있다.

<http://www.project-syndicate.org/blog/risks-of-debt--the-real-flaw-in-reinhart-rogoff>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 중 정부 부채가 높은 경우도 성장률이 하락하는 상관관계를 보인다. 하지만 이런 국가들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었으며, 래리 서머스가 계속 주장하듯이 GDP 대비 부채가 높아지는 것은 분자(부채)의 문제가 아니라 분모(GDP)의 문제로부터 나온 결과이다. (역주 : 성장이 정체되어 GDP가 낮아지면서 분모가 줄어들어 전에 비해 부채 비중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금리가 낮고, 인플레이션도 없고, 주가가 상승 중이며, 이전까지 건강한 성장을 해온 국가들의 경우 부채와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의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렇다.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이 정상 수준보다 높아지고,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전까지는 정부 부채가 조금 더 축적되어도 전혀 위험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바로 지금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 - 낮은 고용과 약해진 경제력 -을 해결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한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he-impact-of-public-debt-on-economic-growth-by-j-bradford-delong>

### 누가 거대한 나쁜 부채를 두려워하는가? (Who's Afraid of the Big Bad Debt?)

2013년 4월 30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리카르도 하우스만(Ricardo Housmann)

얼마 전 주요 언론을 통해 전해진 경제학자들 사이의 논쟁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논쟁의 한 편에는 카르멘 라인하트와 케네스 로고프가 있고, 다른 한 편에는 폴 크루그먼이 있었다. 최근의 일들은 텔레비전 코메디 쇼에 사용되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로고프와 라인하트가 2010년에 발표한 유명한 논문이 문제였는데, 높은 공공 부채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머스트의 매사추세츠 대학의 대학원생 토마스 헨던(Thomas Hordon)과 그의 교수인 마이클 애쉬(Michael Ash), 로버트 폴린(Robert Pollin)은 논문을 통해서 로고프와 라인하트의 주장에 의문을 던졌고, 폴 크루그먼이 이를 유명하게 만들어줬다.





현던, 애쉬, 폴린은 라인하트와 로고프가 얻어낸 결과가 코딩 에러와 미심쩍은 방법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같은 트집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들의 주장은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논문 내용을 완전히 반박하지는 못한다. 대체 왜 이렇게 소란들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 논쟁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적자 축소와 경기부양 사이에서의 선택에 있어서 많은 의미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 논쟁은 케인즈주의자와 (크루그먼의 표현에 의하면) “긴축주의자(Austerians)”, 즉 정부 부채를 막기 위해 재정 긴축을 주장하는 이들 사이의 논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케인즈주의자들의 처방은 간단하다. 경제가 침체되면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하고, 경제가 과열되면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려서 경기를 가라앉혀야 한다. 공공 부채의 수준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 정책가들이 여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특히 미국과 영국을 보면 그렇다. 높은 재정 적자와 부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억제되고 있으며 장기 금리는 역사적으로 낮은 추세이다. 경기를 부양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흥미롭게도 라인하트와 로고프도 위와 같은 제안에 광범위하게 동의했다. 적어도 미국에 대해서만은 그랬다. 그들은 심지어 주택담보대출을 상각하고 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한 이단적 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논문은 전혀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다. 높은 수준의 공공 부채가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해 다루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정부 부채 수준은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크루그먼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한다. 크루그먼은 경제가 침체상태라면, 부채가 증가해도 금리는 낮게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위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 불리는 이들에 의한 투기적 공격에 대한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한다.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논문은 높은 공공 부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담고 있으며, 전 세계를 포괄하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부채가 높은 국가들은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논쟁은 경제 침체기에는 정책가들이 부채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거대한 나쁜 부채가 존재한다. 그러한 사례는 세계에 널려 있다. 이 부채는 늑대 같아서 언제 굴에서 나와서 혼란을 만들지 알 수 없다.



스페인을 생각해보라. 2008년 위기가 터졌을 때, G20은 그해 11월에 각 국 정상들을 소집하였고 케인즈주의자들의 처방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모든 국가들이 재정 확대를 하여 경제를 부양시켜서 침체를 뚫고 가기로 합의했다. 당시 스페인의 재정장관인 페드로 솔베스(Pedro Solbes)는 재빨리 공공 부문의 투자와 지출을 늘렸다.

하지만 2009년 봄이 되자 솔베스는 정반대의 길로 돌아섰다. 세수가 급감하고 지출이 팽창되자, 정부는 거대한 적자를 떠안게 되었고, 국채 가격은 급락했으며, 금리는 치솟았다. 정부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금융의 역사는 이와 비슷한 사례로 가득 차 있다. 1994년 멕시코, 1998년 러시아, 1999년 에콰도르, 2001년 아르헨티나, 2002년 우르과이, 2003년 도미니크 공화국, 1976년 미국. 모두 경기 침체와 실업율과의 싸움이었으며, 재정 적자에 빠져 어려움을 겪었다. 사실 한 국가가 이러한 위기에 빠졌을 때, 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고 금리를 낮춤으로써 결국은 경기 확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크루그먼이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논문에 대해 말하는 것 같은, 긴축주의자들과 케인즈주의자 사이의 논쟁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적절성이 떨어진다. 크루그먼은 재정 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정부 부채의 수준은 중요하다. 특히 부채의 통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미국은 자체 통화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다. 연방준비은행은 정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 게다가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로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다. 엄청난 공공 부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충분히 엔화를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스페인의 부채는 유로화이다. 스페인은 유로화를 찍어낼 수 없으며, 그나마 대부분은 외국인들이 갖고 있다. 많은 신흥국들이 비슷한 처지이다. 제네바 대학교의 개발학 대학원(Graduate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의 우고 파니자(Ugo Panizza)는 최근 논문을 통해서 2008년 이후 크루그먼이 신봉하는 케인즈주의적 경기 역행적 정책을 펼친 신흥국가들은 낮은 수준의 외환 부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위기 이전에 긴축적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위기 이후에 케인즈주의적 정책을 펼 여력이 있었던 것이다.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논문에서 찾아낸 약점이 무엇이던 간에 상관없이, 경기침체 시의 국가들이 언제나 적자나 부채 수준에 신경 쓰지 않고 경기부양에만 집중해도 되는 것은



## 재정 긴축을 놓고 충돌하는 세계 ..... 이수연

아니다. 오늘날 미국의 상황에는 맞는 말일지 몰라도 그 외의 대부분의 국가들에게는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he-limited-relevance-of-the-austerity-debate-by-ricardo-hausmann>



---

## 아베노믹스, 디플레이션, 그리고 고령화

2013.06.17 |

여경훈\_새사연 연구원 | noreco@naver.com

---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인구 증가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미래에 관한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을 아는 것보다 인구추세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익숙해져 온 것과 비교하면, 인구 감소의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미래가 현재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은 기존의 관습적인 사고와 행동 양식에 너무도 불쾌하여 실제 행동에 상당한 저항을 초래한다.” – 케인즈(1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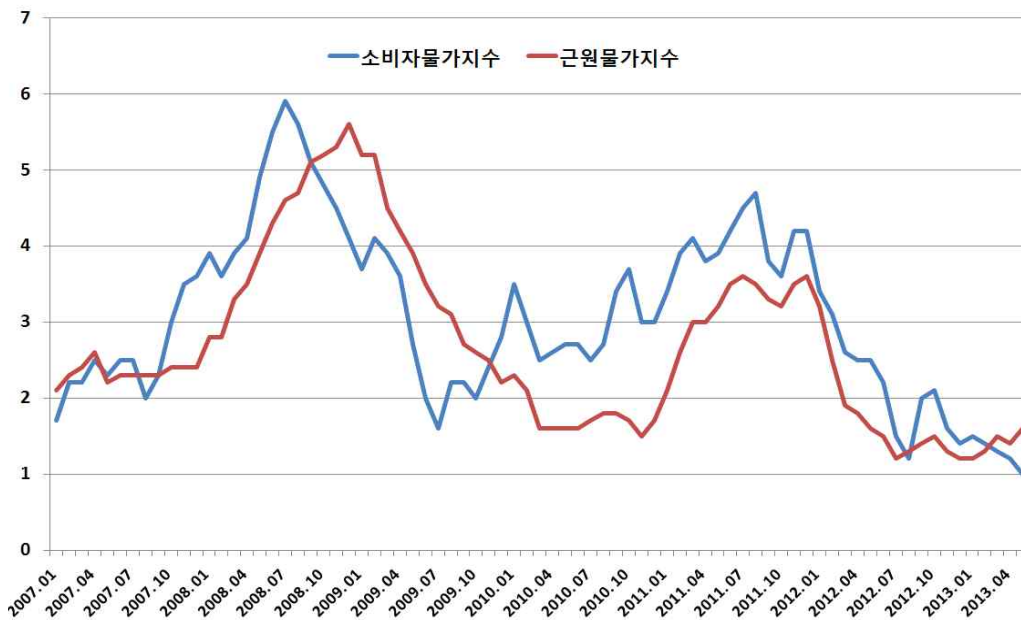


### 한국 1%대 저물가, 일본 디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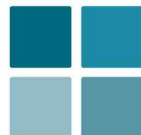
국내 소비자물가가 작년 11월부터 7개월째 1%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는 1%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IMF위기 이후인 1999년을 제외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다. 생산자물가는 작년 10월부터 8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벌써부터 장기 저성장-저물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연간 2.3%의 물가상승률을 예상하는 한국은행의 전망처럼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다시 2% 대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단기 저물가 현상을 기초로 장기 물가상승률을 전망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다만, 20여 년의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소중한 역사적 경험일 수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처방이다. 만약 선진국경제가 지금과 같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독특한 거시경제 현상과 여러 정책 실험들은 중요한 자료와 교훈이 될 수 있다.

[그림1]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세, 2007-2013.5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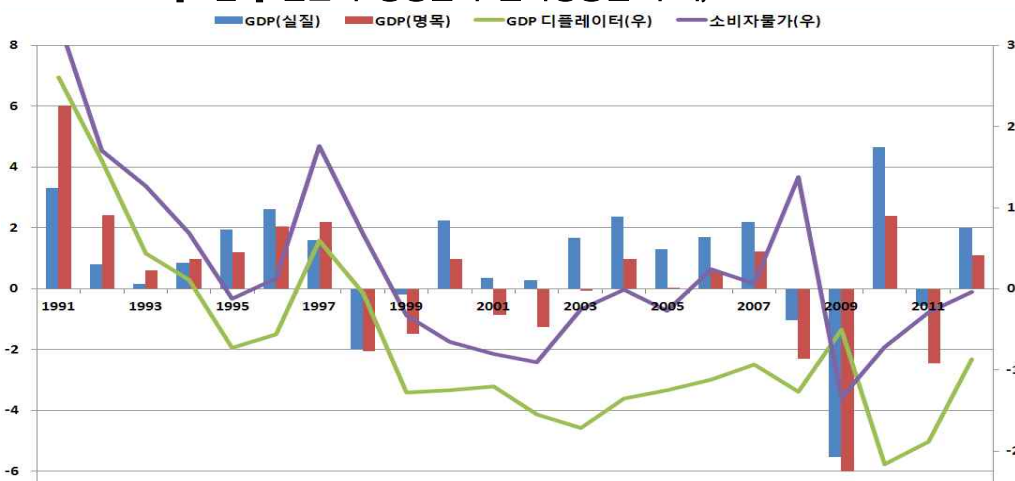
### 일본, 디플레이션과 장기 침체

아래 그림은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실질GDP 성장률(파란색)을 보면, 1980년대에는 5~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이후 20여 년 동안 2010년을 제외하고 3%를 넘긴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1997년 긴축 이후 몇 차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1~2% 수준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명목GDP 성장률(붉은색)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기간이 더 많다. 이는 두 변수의 차이인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연두색)을 보면 뚜렷이 확인된다. 1998년 이후 GDP 디플레이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2년 일본의 명목GDP는 476조 엔에 달하는데, 이는 1997년 명목GDP(523조 엔)의 91% 수준으로 1991년 명목GDP에 불과하다. 명목GDP로만 보면 과히 ‘잃어버린 20년’ 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이는 바로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물가수준의 하락이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물가변동률이 0이하로 떨어지는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물가변동률이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상승률이 감소하는 현재 한국경제와 같은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예를 들어 2%대에서 1%대로 하락)과는 구분된다. 즉 디플레이션이란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1966년 이후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미국의 ‘대공황’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예외다.

[그림2] 일본의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추세, 1991-2012



\*자료: Japan Cabinet Officer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한 이듬해인 1930년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2.3% 하락했으며, 31년에는 9%, 32년에는 9.9%나 떨어졌다. 33년에도 5.1% 떨어져 대공황 기간 소비자물가는 27%나 하락하였다. 1934년이 되어서야 3.1% 상승하여 디플레이션 공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대공황이 장기간 지속된 것도 바로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학자 피셔(Fisher)는 디플레이션을 ‘모든 악의 근원’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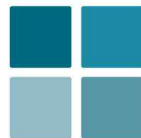
### 디플레이션은 왜 문제인가?

그러면 여기에서 왜 금융시장에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불안심리가 이어지고, 일본 정부는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이를 극복하려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가가 하락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동일한 현금을 가지고도 더 많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내 소득은 변함이 없더라도, 물가가 10% 하락하면 그만큼 더 많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즉 실질소득 또는 구매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 우호적인 환경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저축의 역설’ 처럼 디플레이션 현상에도 부분의 참이 전체의 진리로 반드시 어이 지는 것은 아니라는 ‘구성의 오류’가 작동한다. 경제란 유기체처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소비자로서 개인과 생산자로서 개인이 칼로 무를 자르듯 구분될 수 없다. 내가 소비자로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로서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통상 디플레이션이란 상품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경기침체에서 발생한다. 개별기업의 비용 삭감(주로 노동자 해고나 임금 삭감)을 통한 이윤추구 활동은 개별기업에게는 이득일 수 있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과 소득을 줄여 또다시 상품가격을 하락하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즉 디플레이션은 경기침체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디플레이션 자체가 경기침체를 초래하고 지속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그 경로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므로, 디플레이션은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총수요 부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처럼 명목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명목금리를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상승하고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미국의 크루그먼 등은 이를 유동성 함정에 빚대기도 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매년 10%의 속도로 디플레이션이 진행된다면, 비록 0%의 금리로 1억 원에 상응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실제로는 10%의 비용(실질금리)으로 대출을 받게 되는 셈이다.



왜냐하면 내년에 갚아야 하는 1억 원은 올해 빌린 1억 원보다 10%만큼 구매력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목금리가 제로일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실질금리는 디플레이션율과 같아진다. 간단히 말해, 명목금리를 올리면 실질금리가 상승하듯이, 명목금리가 제로인 상황에서는 디플레이션은 바로 실질금리의 증가를 초래한다. 즉 디플레이션의 폭이 커질수록 소비와 투자에 필요한 차입을 더 꺼릴 수밖에 없다.

둘째, 소비 및 투자 지출 연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이다. 오늘 사려고 했던 상품의 가격이 내일 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면 소비를 내일로 미루는 것은 합리적 행위일 것이다. 특정 상품이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된다면, 민간의 현재 소비가 미래로 연기되고 이는 민간소비의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 기업 또한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투자를 연기하게 되면 경기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또 다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하듯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소비, 투자, 그리고 차입을 위축시켜 또 다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일컬어지는 금융 및 신용 경제와의 연계다. 다른 경제 변수와 달리 ‘부채’는 명목 단위로 계산되는 계약 관계를 반영한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명목 기준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면 부채의 실질 상환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과거’에 계약된 부채의 실질총액은 디플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그만큼 실질부담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올해 디플레이션이 10%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작년에 계약한 1억 원 상당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의 실질부담은 이자를 제외하더라도 10%만큼 증가한다. 명목상으로는 올해 1억 원을 갚으면 되지만, 올해 상환해야 하는 원금은 실질적으로 10%만큼 구매력이 늘어난 금액이기 때문이다. 물가가 떨어졌다고 원금을 할인해 주겠다고 나서는 선량한 채권자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 부담 및 불이행 위험 증가 → 금융기관 부실화 → 금융기관 중개 기능 약화(신용경색) →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연결되어 총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보다 소득 수준이 낮다고 할 때, 이 계층은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으므로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자 줄어들 수 있다.

만약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경우, 자산가격의 연쇄적인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자본 및 담보가치 손실로 이어져 또 다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한다. 대출(부채) 증가 → 자산 가격(담보가치) 상승 → 대출 증가 → 소비 증가가 부채형 소비버블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때, ‘과잉부채’와 담보가치 하락은 부채주도 디플레이션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넷째, 디플레이션에 따른 부채의 실질부담 상승은 비단 민간의 골칫거리만은 아니다. 통상 한 나라의 부채 상환 능력은 명목GDP 대비 정부부채로 정의된다. 디플레이션은 명목GDP의 감소를 초래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는 정부부채 증가로 이어져 국가의 부채 상환 능력이 악화된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경기침체는 누적적인 부채 상환 부담의 악화로 이어진다. 일본이 GDP 대비 230%에 달하는 정부부채로 늘어난 것도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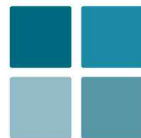
### 디플레이션 처방, 아베노믹스

1998년 이후 ‘일본 문제’ 로 정의되는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처방들이 제시되었다. 공급주의 시각에서는 일본의 생산성 문제를 주로 지적한다. 따라서, 금융, 서비스,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와 법인세 감세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제시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 인 구조 개혁(structural reform)이라 부르는 성장전략은 전형적인 규제완화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다음으로 과도한 부채와 버블 붕괴가 가계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 행위의 목표를 이룬 극대화에서 부채최소화로 전환시켜 총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민간의 지출 축소를 보상하기 위하여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정책 처방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대차대조표 경기침체(Balance Sheet Recession)으로 일본 문제를 분석한 노무라 증권 리처드 쿠(Richard Koo)가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아베노믹스의 이론적 배경으로 알려진 크루그먼 등은 ‘유동성 함정’ 이라는 분석 틀로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제시한다. 크루그먼은 1998년부터 일본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고, 실제 각각 1999년과 2001년부터 시행된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은 크루그먼의 이론적 영향과 조언이 적지 않았다. 1998년 그는 일본 문제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처방을 제시하였다.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없다. 예를 들어, 일본은행은 본원 통화의 양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 단지 일본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하기만 하면 된다. 이미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통화 공급을 늘리더라도 금리를 많이 낮추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통화 공급 증가는 금리 하향 이외에 다른 채널로 경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현금이 늘어나면 직접 지출을 자극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현금은 가계가 소비를 늘리거나 예금이 아닌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만든다. 지급준비금이 늘어난 은행은 기꺼이 더 많이 대출하려 할 것이다. 설령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국채를 매입하면 [금리가 내려]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다. ...일본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법은 단순하다: 돈을 엄청나게 찍어라. (P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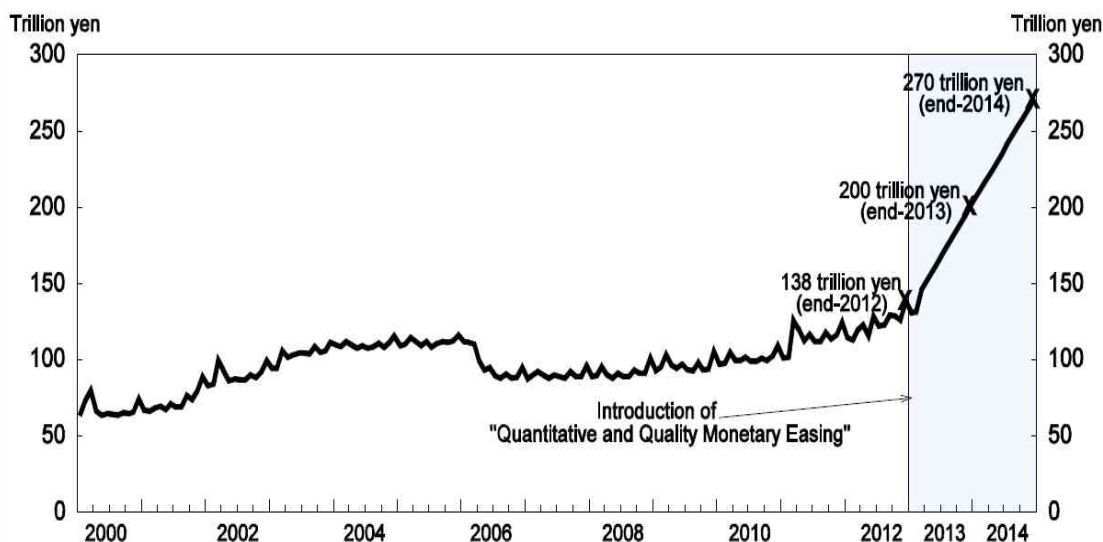
INT LOTS OF MONEY) – Krugman(1998, What is wrong with japan?)

일본에 필요한 것은 미래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중앙은행의 공언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차입자들은 빌린 금액보다 실질 기준으로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하게 될 것을 기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일본이 필요한 것, 바로 기꺼이 더 많이 지출하려고 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일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은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약속이다. – Krugman(1998, What went wrong?)

지금 일본에 필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유발하기 위해, 미래 통화량 증가에 대한 믿을 수 있는 공약이다. 자연스러운 방법은 중앙은행이 장기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야만 한다. – Krugman(1998, Further notes on japan's liquidity trap)

실제 지난 4월 새로 취임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향후 2년 동안 본원통화를 2배로 늘려서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5년 전 크루그먼이 조언한 정책 처방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림3] 일본의 양적완화, 본원통화 추정



\*인용: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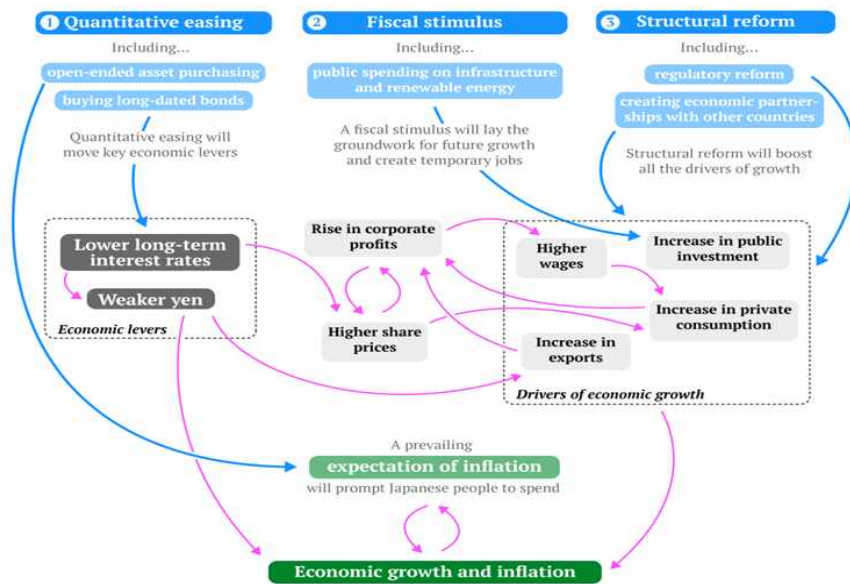
일본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본원통화를 매달 5조 엔만큼 늘리기 때문에, 본원통화는 2013년 말에는 200조 엔, 2014년 말에는 GDP의 50%에 달하는 270조 엔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4월 구로다가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는 분석과 기사가 넘쳐났다. 아래는 시각적으로 아베노믹스의 작동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다.

아베노믹스를 평가하기 전에, 이 모델에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작동 기제들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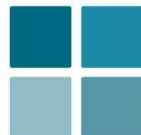
[그림4] 아베노믹스와 세 가지 화살



\*인용 <http://qz.com/>

첫째, 핵심은 양적완화를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를 유발하면 경제는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크루그먼의 논리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기대가 소비를 뒤로 미루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기대는 소비를 앞당기는 기제로만 작동한다. 즉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플레이션 기대를 통해 소비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고착화 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가 뒷받침되고, 최소 1년 이상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최근 통화정책에 대한 중앙은행 내부의 불협화음, 수차례 양적완화 실패에 따른 민간과 정책 당국의 패배주의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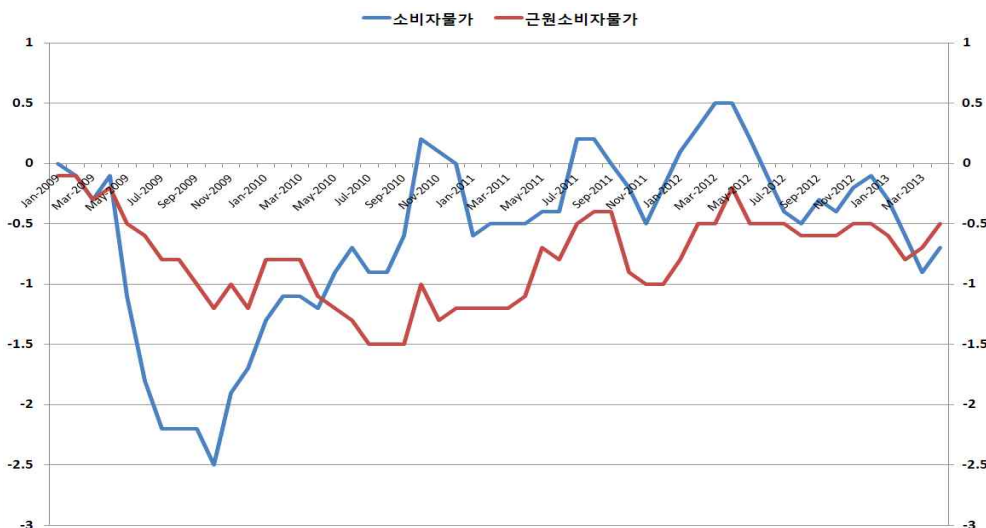
둘째,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의 상승이다. 실제 엔화가치는 지난 해 가을부터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미리 반영되어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지난여름보다 엔화는 유로화에 비해서는 30%, 달러화에 대해서는 25% 가량 평가절하 되었다. 또한 자



연적으로 수입 물가의 상승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지난 해 가을부터 엔저 현상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로 여전히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4월의 통화정책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시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직 물가상승률을 전망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기대와 엔저 현상만으로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없다.

[그림5] 일본의 월별 물가상승률, 2009.1-2013.4



\*자료: OECD

셋째,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임금이 생산성에 비례하여 상승해야만 한다. 인플레이션이란 결국에는 경제 전체의 생산 능력보다 총수요가 초과하여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위 그림을 보면,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면 임금이 상승할 것이라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을 뿐, 어떤 작동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사 임금 협약 등 소득정책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일본 교토 대학 오바타(Obata) 교수의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은퇴하면서 저임금 젊은 노동자들로 대체되고 있다. 따라서 아베가 희망하는 것과 달리, 일본의 전반적인 소비자의 지출 구매력은 하락할 것이다. 개별 기업은 임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구 변동 때문에 임금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sup>3)</sup>

3) Reuters(2013/4/29), Japan's "Abenomics" detractors brace for "I told you so" mo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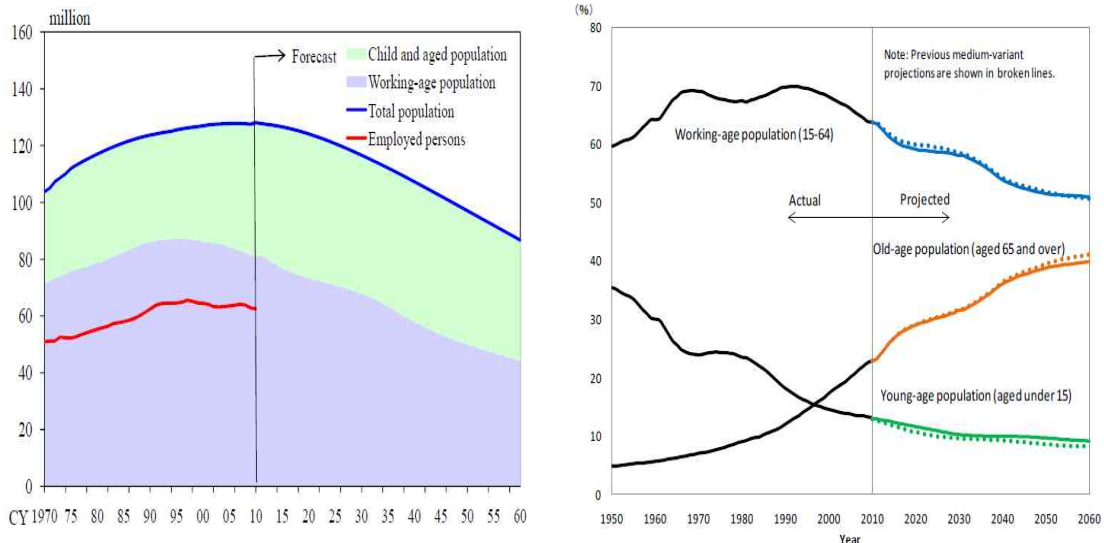


### 고령화와 일본 문제

일본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제로금리, 양적완화, 재정확대 등 통상적인 거의 모든 거시경제 정책을 총동원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특정 경제가 20여 년 동안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최근 물러난 시라카와 전 일본은행 총재는 작년 일본은행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일본의 저성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과거 20여 년 동안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처음 10년 동안, 일본경제는 버블 붕괴에 따라 치명타를 입고 비틀거렸다. 다음 20년 동안, 급속한 고령화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일본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sup>4)</sup>

[그림6] 일본의 인구 변동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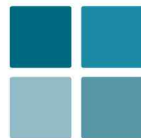


\*인용: Shirakawa(2012),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2012)

실제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총인구는 각각 1995년과 2007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65세 이상)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2%에서 2013년 25%로 증가하였다. 일본의 장기침체, 부동산 버블 붕괴, 디플레이션 등 일본문제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고령화 시기와 겹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한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디플레이션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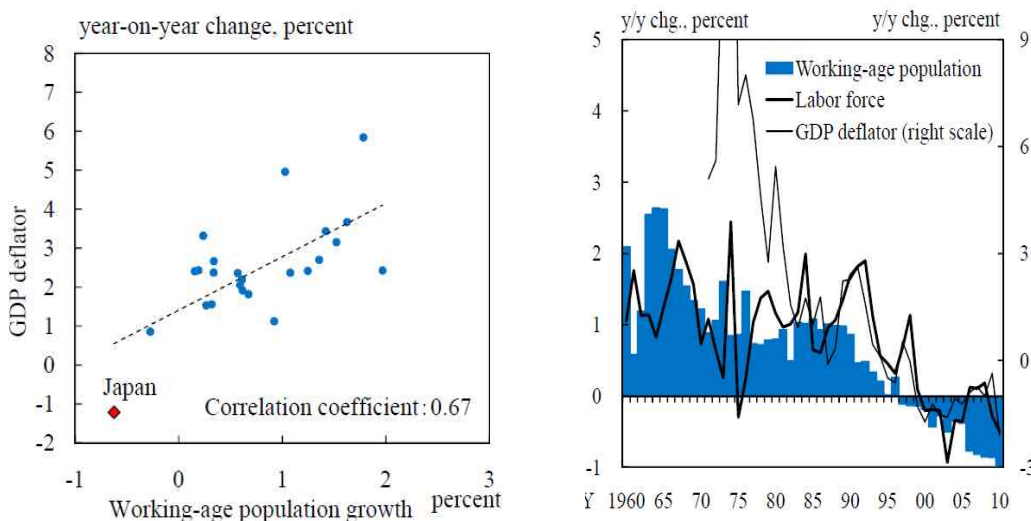
일본은행이 24개 선진국경제를 대상으로, 2000년대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과 생산가

4) Shirakawa(2012), Demographic changes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Japanese experiences.



능인구 증가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뚜렷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그림 6] 왼쪽 그림 참조). 경제활동참가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나타난다. 위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 1990년대 중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점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은 공교롭게도 일치한다. 아직 고령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디플레이션의 관계를 밝히는 거시경제학 분석은 미천한 수준이다.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발전한 경제학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관심과 분석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간략한 메커니즘을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7] 인구 감소와 디플레이션의 상관관계



\*인용: Shirakawa(2012)

첫째, 경제성장률은 취업자 증가율과 생산성 증가율로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률(실질소득) 감소로 나타난다. 실제, 2000년대 일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0.8%에 달했지만, 취업자는 -0.3% 감소하여 실제 성장률은 0.6%에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일반적으로 현재와 미래 소득이 기대되는 생산가능인구가 과거 소득으로 살아가는 고령 인구보다 소비성향이 높다. 따라서 고령화에 따라 고령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 민간의 소비총액이 줄어들게 된다.

셋째, 고임금을 받는 다수의 고령인구가 은퇴하고, 저임금을 받는 소수의 신규취업자가 진입하면 총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500만원을 받는 은퇴자의 임금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88만원 세대 다섯 명이 신규로 취업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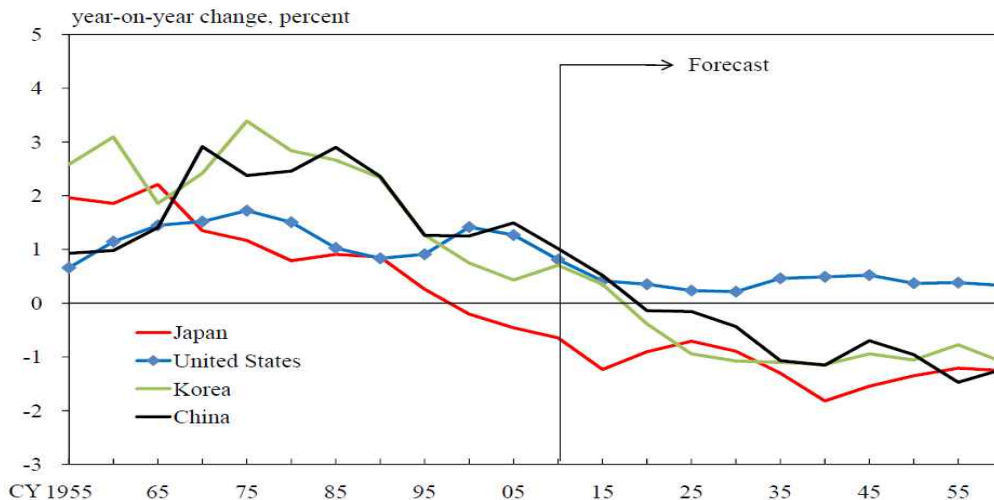


넷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정부부채 증가, 그리고 지속적인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은 예비적 형태의 저축 증가를 초래한다.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기보다는 개인과 시장 중심의 복지체제는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 일본 문제는 우리의 20년

고령화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199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나라는 4년 후인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또한 2020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 또한 금융위기 이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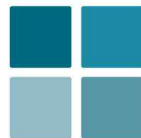
[그림8] 주요 국가의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추정



\*인용: Shirakawa(2012)

어쩌면 20년 전부터 일본이 겪어 온, 부채, 버블 붕괴, 장기 침체,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등 거시경제 현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20년이 될 지도 모른다. 우리 경제도 이미,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2% 저성장, 1% 저물가, 2% 저금리의 시대를 겪고 있다. 따라서 아베노믹스를 비롯한 일본의 정책 실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자 자료가 될 수 있다. 선불리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를 전망하기보다,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다가 올 미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심도 깊은 분석을 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힘껏 하늘을 향해 돌을 던져도 결국 얼마 가지 않아 땅에 떨어지고 만다. 물체 운동의 배후에 결국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베가 야심차게 하늘을 향해



세 가지 화살을 쏘았지만 결국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일본의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의 배후에 고령화 현상이 작용한다면 말이다. 물론 아베의 세 가지 화살은 방향 또한 잘못 되어 있다. 특히 구조 개혁이라 알려진 세 번째 화살은 철지난 신자유주의 처방의 반복에 불과하다. 어떻게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소득분포를 균등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노동자의 임금을 올릴 것인가, 이런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아베노믹스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미 1930년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강의에서, 케인즈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지금 시기 일본과 우리가 되새길만한 통찰이다.

*따라서 미래 번영의 균형 조건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득의 더 적은 비중이 저축되도록 우리의 제도와 재산의 분포를 바꾸거나, 기술혁신과 소비가 더 많은 수익성이 날 정도로 충분히 금리를 내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소득의 균등한 분포를 거부하고, 은행업과 금융 권력이 19세기에 평균적으로 지배하던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하는데 성공한다면, 자원의 과소고용을 초래하는 누적적 경향은 결국에 그 사회의 형태를 약화시켜 파괴하고 말 것이다.<sup>5)</sup>*

---

5) Keynes(1938), Some economic consequences of a declining population.





---

##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가 평가하는 차베스

Latin America After Chavez, Luiz Inacio Lula da Silva

2013.03.09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naver.com

---

강력하고, 역동적이며, 잊을 수 없는 차베스의 이념(idea)은 대학에서, 노동조합에서, 정치 정당들에서, 그리고 민중들이 사회적 정의와 고통의 경감과 권력의 공정한 분배를 문제 삼는 모든 장소에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토론될 것이다.



▶ 역자의 글 ◀

브라질의 룰라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동시대에 동일한 과제를 떠안았던 남미의 대표적인 두 지도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스타일은 상당히 달랐고 때문에 국내외적인 평가도 다르게 나타난다. 어쨌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브라질 대통령을 지냈던 룰라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과 함께 8년 동안 남미의 반신자유주의 개혁과 남미 통합을 위해 협력과 경쟁, 때로는 일정한 갈등을 겪으면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한 대표적 지도자임에 틀림없다. 그만큼 차베스를 근접 거리에서 경험했으면서 동시에 일정한 거리에서 평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도자가 룰라다.

차베스 대통령이 서거한 다음날 룰라는 오랜 정치적 동반자인 차베스를 추모하는 장문의 글을 뉴욕 타임스에 기고했다. 이 글에서 룰라는 차베스의 정치 스타일이나 행동에 대해 자신이 동의하지 못하는 대목도 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시종일관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민중에 바친 헌신과 남미의 통합에 기여한 공적이 그 어떤 것으로도 부정될 수 없다는 확신을 글 전체에서 강조하면서 추모와 경의를 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독자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전달해주고 있다.

2007년 봄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던 우리 연구원은 차베스의 서거에 즈음하여, 그때나 지금이나 주관적인 평가가 극단으로 엇갈리는 우리의 지적 풍토에서 좀 더 객관적 접근을 돕고자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룰라의 글을 요약해 보았다. 다른 글은 몰라도 룰라의 생생한 평가에는 대부분 공감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차베스 이후의 남미 (Latin America After Chavez)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2013년 3월 6일  
룰라(Luiz Inacio Lula da Silva)

오랜 암 투병 끝에 지난 3월 5일 화요일 우고 차베스가 서거한 이 시점에서, 그가 남미의 통합을 위해 했던 역할과, 베네수엘라 빈민에게 그의 14년 재임기간이 가지는 의미는 역사가 정당하게 평가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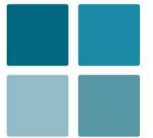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베네수엘라 국내 및 국제 정치적 문맥 차원 모두의 측면에서 차베스 대통령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틀림없이 오늘날 가장 역동적인 대륙인 남미의 지도자와 민중들로 하여금,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왔던 국제적인 통합을 더 전진시키기 위하여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차베스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와, 남미국가들의 통합을 위한 그의 깊은 신념, 그리고 민중의 고통을 개선하는데 절실했던 사회 개혁을 위한 그의 헌신이 없어진 상황에서, (남미 통합과 같은) 과제들은 새삼스럽게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이 특히 보건과 주거, 교육 등에서 이룬 사회개혁은 수천만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차베스 대통령이 주장하거나 실천한 것 모두를 꼭 동의할 필요는 없다. 그가 논란이 많은 사람이고 때로는 극단적이며, 논쟁을 절대 회피하지 않는다는 어떤 주제도 터부시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차베스 대통령이 했던 것들 중 어떤 것은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분별력 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나에게 들었을 때도 있었다고 시인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성향이며 이로 인해 그의 품격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차베스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이데올로기나, 비판자들이 ‘권위주의(autocratic)’라고 간주했던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할 수 있다. 그는 가볍게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절대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정직한 사람이라면, 더구나 그의 극심한 반대파라고 하더라도, 베네수엘라 빈민과 남미의 통합을 위해 차베스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높은 동지애와 신뢰, 그리고 심지어 애정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나의 인생에서 만났던 수많은 유력 인사와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남미 대륙과 그곳에서 생활하는 다양한 민중들(토착 인디



언이나 유럽과 아프리카인의 후예들, 그리고 최근의 이민자들)의 통합을 차베스만큼 그렇게 믿었던 지도자는 거의 없다.

장래에 유럽연합 모델을 향해 갈 수도 있는, 12개 정부들의 조직으로 2008년에 구성된 남미국가연합의 결성 조약에서 차베스 대통령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0년에 남미 공동체와 카리브해 국가들은 미주기구(OAS)와 나란히 정치포럼을 구성함으로써 통합을 이론적 수준에서 실천적 단계로 도약시켰다. (미주기구와 달리 미국과 캐나다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미주개발은행(IDB)과는 다른 새로운 대출기관인 남미은행 역시 차베스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베스 대통령은 남미가 아프리카나 아랍세계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발전시키는데 매우 관심을 기울였다.

만약 공인(公人)이 아무런 이념(idea)도 남기지 않고 사망했다면, 그의 유산과 정신 역시 사망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차베스 대통령은 아니었다. 강력하고, 역동적이며, 잊을 수 없는 차베스의 이념(idea)은 대학에서, 노동조합에서, 정치 정당들에서, 그리고 민중들이 사회적 정의와 고통의 경감과 권력의 공정한 분배를 문제 삼는 모든 장소에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토론될 것이다. 아마도 그의 이념은 미래에 청년세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위대한 남미의 해방 전사 시몬 볼리바르의 인생이 차베스 자신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처럼.

이념적 영역에서 차베스의 유산이 지지분한 정치 세계에서 현실화되려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 지점에서 그의 이념은 논쟁되고 경쟁될 것이다. 차베스 없는 세계는 차베스가 했던 노력과 의지를 대체할 새로운 지도자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차베스의 꿈은 한낱 문서상으로만 기억되지는 않을 것이다.

차베스 대통령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 지지자들은 민주적 제도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들은 정치 시스템을 더 유기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더 쉽게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반대파와 더 대화하도록 해야 하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그룹을 더 강화해야 한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통합과 차베스 대통령이 어렵게 성취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

차베스 지지자이든 반대파이든,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가톨릭 신자이든 개신교도이든, 부자이든 빈민이든 그들의 미래를 약속할 국가적 잠재력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모든 베네수엘라인의 열망이다. 그 열망은 오직 평화와 민주주의만이 현실화시킬 수 있다. 차베스 대통령이 창설을 지원했던 다양한 기구들 역시 남미 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그는 더 이상 남미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겠지만 그의 이상



(ideals)과 베네수엘라 정부가 계속 이어가게 될 것이다. 남미와 카리브해 정치 지도자들의 민주적 동지에는 우리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통합에 대한 최선의 보증이 될 것이다.

통합을 향한 움직임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 그러나 남미 통합 노력을 지속시키면서도 유엔이나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포럼에 대한 남미 국가들의 참여 협상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2차 대전 이후에 탄생한 이들 기구들은 오늘날 다극화된 세계의 현실과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카리스마 있고, 개성이 강하며, 어떤 지도자들도 갖기 어려운 대중과의 친화력과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던 차베스 대통령이 그리울 것이다. 나는 함께 대통령을 하던 8년 동안에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와 우리 민중들의 이익에 기여했던 그와의 우정과 동반정신을 언제나 소중히 생각할 것이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nytimes.com/2013/03/07/opinion/latin-america-after-chavez.html?\\_r=0&pagewanted=print](http://www.nytimes.com/2013/03/07/opinion/latin-america-after-chavez.html?_r=0&pagewanted=print)



---

## 동아시아 산업정책 경험과 아프리카의 발전

East Asia's Lessons for Africa, Joseph E. Stiglitz

2013.04.30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naver.com

---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워싱턴 컨센서스’가 권고한 것과 상당히 다른 경로를 따랐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책은 성공했지만 어이없게도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은 비참한 실패를 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들 성공과 실패를 돌아봄으로써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아프리카 국가들 자신만의 발전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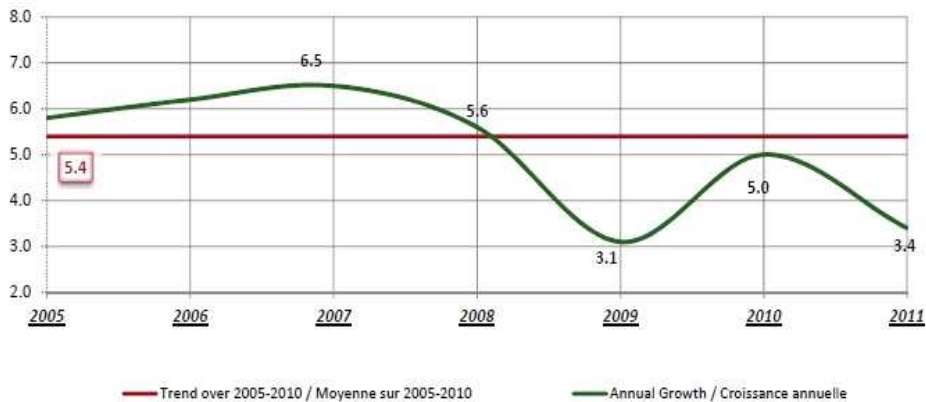
▶ 역자의 글 ◀

우리는 그 동안 세계경제를 논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세계의 주요한 구성부분인 아프리카를 제외하는 너무나 확연한 실수를 반복적으로 해왔다. 그러면서도 별 다른 문제의식도 없었다.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자체를 무시해온 것이다.

이번 기회에 아프리카에 대한 기본 지표를 확인해보자. 세계 230여개 국가 가운데 54개 국가가 아프리카에 있으며 그 중 48개국 이 아래 글에서 주로 다루는 사하라 사막 남쪽의 국가들이다(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와 같은 사하라 사막 북쪽 국가들은 그나마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규모가 크고 발전된 나라들이다). 2010년 처음으로 아프리카 인구가 10억을 돌파했으니 인구 기준으로는 세계의 1/7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셈이다.(출처: UN, "African Statistical Yearbook 2012")

아프리카의 경제 규모는 어떨까? 2010년 기준 아프리카 전체의 GDP(시장가격 기준)는 약 1.7조 달러로서 세계경제의 2%남짓에 불과하고, 그나마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는 1조 달러 남짓으로 한국경제 규모와 유사한 정도다. 인구대비 경제 규모는 여전히 얼마나 낮은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대 이래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왔으며 지난해에도 4.5 %이상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한국의 2%보다 훨씬 높다. 더욱이 청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아프리카 인구구조는 향후 이들 국가들이 세계경제 성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더 이상 세계경제에서 54개 아프리카 국가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다.

[그림 1] 아프리카 실제 GDP 성장률(%)



출처: UN



어쨌든 가장 적극적인 신자유주의 비판적 경제학자이자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스티글리츠가 최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아프리카 관련 칼럼을 한편 기고했다. 그는 서방 경제학자 중에서도 특이하게 동아시아를 포함한 제 3세계 경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글리츠는 최근 아프리카 경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지금 아프리카가 필요한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경험임을 강조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특히 현재 세계경제의 거대한 변화 물결 가운데 중국의 변화를 특정하고 있는 대목이 흥미롭다. 최근 20여 년 동안 세계의 공장으로서 장난감에서부터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모든 공산품과 자원을 빨아들이던 중국경제에서 그 토대를 이루고 있던 저임금 구조와 유리한 환율 여건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중국 노동자 임금상승과 위안화 평가절상 등의 환경변화는 장차 중국이 빨아들이던 제조업 일부가 점차 더 낮은 임금 비용이나 무역여건을 찾아 중국 밖으로 빠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제조업 등을 흡수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은 아프리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이제까지 제조업 쇠퇴와 투자할 산업 영역의 부족으로 경제발전이 지체되었던 아프리카에 중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스티글리츠는 강조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아프리카가 중국의 제조업을 흡수하면서 발전과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민영화, 작은 정부 같은 정책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이 해왔던 강력한 정부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스티글리츠는 역설하고 있고, 바로 이 대목이 칼럼의 핵심이다.

이 글을 통해 엄연한 세계경제의 한 부분인 아프리카 경제에 대한 관심을 돌려보자. 동시에 이후 중국경제의 위상 변화에 따른 아프리카 경제의 기회에 대한 스티글리츠의 전망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에서의 산업정책 경험이 어떤 시사를 주고 있는지도 새삼스럽지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도 일종의 산업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점에서는 어떤 산업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여지를 줄 수 있겠다.





## 아프리카가 배워야 할 동아시아의 교훈 (East Asia's Lessons for Africa)

2013년 6월 3일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프로젝트 신디케이트(<http://www.project-syndicat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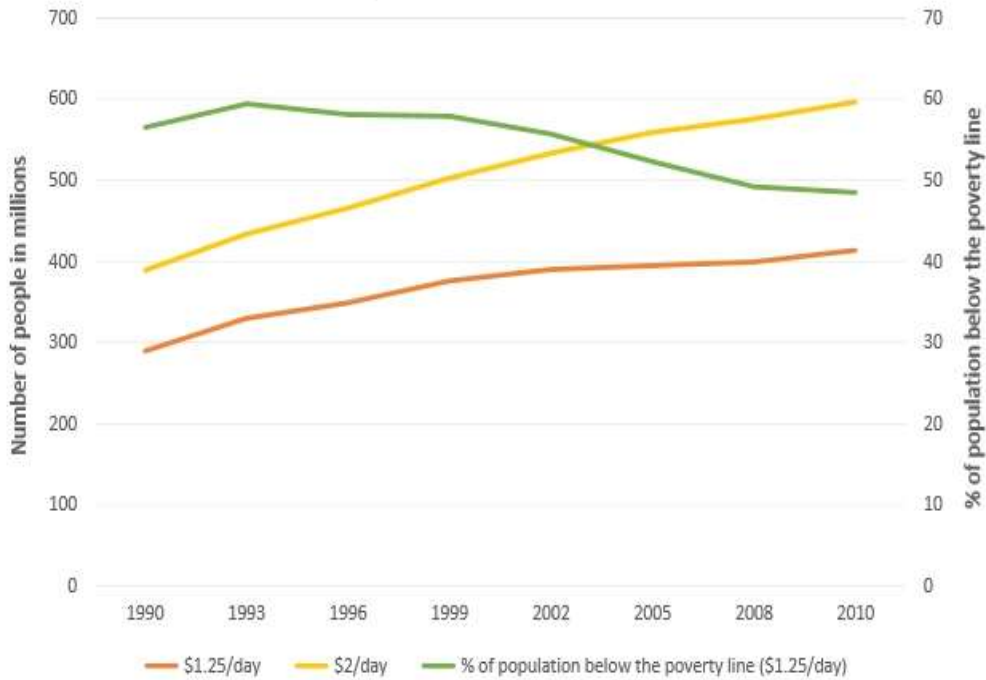
6월 1~3일 사이에 일본은 TICAD(아프리카 개발 도쿄협력, the Tokyo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frican Development) 5차 회의를 주최했다. 그 회의는 전 세계가 유럽의 경제적 고통과 미국의 정치적 마비상황, 그리고 중국과 다른 신흥시장의 경제적 부진에 몰두해 있는 동안에도,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빈곤이 예외가 아니라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사하라 사막 남쪽 아프리카에서는 하루 1.25달러의 빈곤 선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300만 미만에서 거의 425만 명까지 늘어났고,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약 390만 명에서 거의 6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빈곤 비율은 57%에서 49%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다. ([그림 2] 참조)

선진국들은 반복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와 교역 약속을 파기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20년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으로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즉 형편이 나은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문자 그대로의 이유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빈곤



Source: The World Bank, <http://povertydata.worldbank.org/poverty/region/SSA>  
 © Project Syndicate

출처: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오늘날 아프리카는 혼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에서 2011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한 10개국 중에서 다섯 나라는 인구 천만 명 이상을 가진 아프리카 국가들이었다. 또한 이들 국가의 발전은 단지 천연자원에만 의존한 것도 아니었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였던 에티오피아는 2007~2011년까지 매년 거의 10%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르완다와 탄자니아, 우간다는 10년 이상 6%이상씩 성장해 왔다. 그 결과 몇몇 자료에서는 아프리카에서의 중산층(연 소득 2만 달러 이상) 비율이 인도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은 여전히 세계 최고수준의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는 대륙이기도 하다.

다수 빈민들이 의지하고 있는 농업의 성장 역시 시원치 않았다. 헥타르 당 생산량은 정체되어 있다. 경작지의 4%정도만이 관개수로가 되어 있는데, 이는 남아시아의 39%, 동아시아의 29%와 비교가 된다. 남아프리카에서의 헥타르 당 비료 사용량은 13킬로그램에 불과한데 이 역시 남아시아의 90킬로그램, 동아시아의 190킬로그램과 비교된다.

가장 큰 문제는 거시 경제적 안정도 달성하고 거버넌스의 진보도 이룬 국가들조차 천연



자원 분야 이외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일본의 지원은 단순히 자금지원과 도덕적 지원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아프리카가 동아시아 발전 경험에서 배워야 할 점을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이점은 최근 중국의 임금 인상과 위안화 평가 절상 등이 글로벌 비교우위와 경쟁력 우위 등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앞으로 일부 제조업들이 중국 밖으로 빠져나오게 될 것인데, 아프리카가 이중 일부를 끌어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에서 제조업 쇠퇴(de-industrialization)의 고통을 겪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말로 2000년대 말까지, 부분적으로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강요한 구조조정 정책 때문이기도 한데, 저개발 아프리카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당시보다도 낮아졌던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 붐이 스스로 생겨나지는 않을 것이다. 아프리카 정부들이 자신의 경제를 재구조화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을 실시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그와 같은 산업 정책이 올바른 것인지는 지금까지도 상당히 논쟁적인 이슈다. 혹자는 정부라는 존재는 산업에서 어떤 기업이 승자인지를 가려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부류들은 어떤 국가가 감자 칩을 생산하든 컴퓨터 칩을 생산하든 하등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산업정책의 목적은 시장에서 잘 알려진 제한성을 해결하는 것인데, 한 산업에 관련된 기술이 다른 산업에 이익이 되는 경우와 같은 외부성 학습이 그런 사례다.

산업정책의 목적은 이와 같은 산업간 파급력을 식별해내는 것이고, 정부는 이런 국면에서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 미국에서 정부는 19세기에 농업을 촉진했고, 1844년에 발티모어에서 워싱턴까지 최초의 통신선 설치를 지원했으며 대륙 사이의 통신 라인도 정부가 지원했다. 그로 인해 통신 혁명을 촉발시킬 수 있었다. 또한 그런 식으로 인터넷 혁명도 육성해왔다. 이처럼 정부는 인프라와 (과세 제도를 포함한) 법과 제도, 그리고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어왔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규제완화 정책과 결합된 조세와 파산관련 법은 비대한 금융 부분의 창조를 효과적으로 부추기기도 했다.

자원이 매우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은 사치스런 낭비를 할 여유가 없다. 그들은 자국 경제가 역동적인 비교 이익을 얻도록 미래 방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발전을 이룩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바로 이렇게 했으며, 동아시아 경험에서 공유해야 할 교훈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오늘날 보유하고 있는 성숙되고 깊이 있는 기술력이 없었던, 시절에 그들 정부가 어떻게 산업정책을 펴왔는지에 관한 것이다. 아프리카의 취약한 거버넌스가 산업정책의 구체적 수단들에 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 산업 정책 자체의 유용성을 해칠 수는 없다.

일본은 또한 다른 교훈도 가르쳐 줄 것이다. 교육과 평등, 토지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포함하여 동아시아를 발전시켰던 핵심 전략 요소들은 오늘날 아프리카에서도 더욱 중요한 것들이다. 반세기 전 동아시아가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 이래, 세계도 큰 변화를 해왔다. 역사와 제도, 환경에서의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정책이 각 지역의 조건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워싱턴 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가 권고한 것과 상당히 다른 경로를 따랐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책은 성공했지만 어이없게도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은 비참한 실패를 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들 성공과 실패를 돌아봄으로써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아프리카 국가들 자신만의 발전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east-asia-s-lessons-for-african-economic-development-by-joseph-e--stiglitz>



---

## 주민들의 건물 공동소유로 높은 임대료 극복하기

Community ownership of public buildings, Andrew Bibby

2013.02.19 |

이수연\_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mailto:soo@saesayon.org)

---

영국에서는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구매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리즈시의 마을 헤딩리에서는 시의회 소유의 낡은 학교 건물을 지역 주민들이 사들였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지역의 예술가와 기업을 위해 공간을 제공하는 센터로 만들었다.



▶ 역자의 글 ◀

동네에서 작은 되살림 가게를 하는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되살림 가게란 기증받은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우리 동네의 가게는 중고물품 외에도 친환경 제품이나 동네 주민이 직접 만든 제품들을 판매한다. 가게에서 다양한 강좌나 강연도 주최하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 청소년을 후원하기도 한다. 동네의 사랑방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시작했지만 몇 달째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

가장 큰 부담은 건물 임대료라고 했다. 인건비야 본인이 좀 덜 받으면서라도 줄일 수 있지만 임대료는 그럴 수도 없어서, 한 달 살림을 꾸릴 때 가장 먼저 마련해두어야 할 비용이라고 했다. 이런 사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소수 정당 등 지역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높은 집값, 땅값, 전세값이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독립만 늦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씨앗들이 자라나는데도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 되살림 가게의 청년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게나 단체들이 함께 돈을 모아 건물을 사버리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같다고 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에서는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구매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리즈시의 마을 헤딩리에서는 시의회 소유의 넓은 학교 건물을 지역 주민들이 사들였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지역의 예술가와 기업을 위해 공간을 제공하는 센터로 만들었다. 1000명의 주민들이 각각 5파운드(약 8400원)씩 출자금을 내어 헤딩리개발신탁을 설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영국에서는 이를 자산관리 혹은 자산이전이라 부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을 개발신탁에서 싼 가격에 매입하거나 대여해서 수익사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토지나 건물을 활용하고 여기서 창출되는 수익을 지역 주민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지난 정권인 노동당 정부가 ‘자산을 일하게 만들기’ 라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지했던 정책이며, 현 정권인 보수당 정부도 2011년 ‘지역주권법(Localism Act)’ 을 제정하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역주권법은 공공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매각할 때 지역공동체가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국 사회적 투자사업 펀드 등은 토지나 건물의 공동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헤딩리개발신탁의 대표는 주민들의 출자금을 통해 자본 마련을 수월히 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이 과정을 통해 헤딩리개발신탁은 명실상부한 주민들의 대표조직이 될 수 있었고, 주민들 또한 이렇게 마련된 건물에 더 많은 소속감과 애착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으로 주의할 점도 있는데, 실제로는 주민들을 대표하지 못하는 조직이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건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 보다 더 근본적인 어려움은 주민들이 스스로를 건물의 주인이라고 느끼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운영과정에서 주민들 모두에게 책임과 권리가 동등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공공건물의 공동체 소유 (Community ownership of public buildings)

가디언(Guardian)  
2013년 1월 17일  
앤드류 비비(Andrew Bibby)

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공공건물의 관리를 협동조합에 위탁하고, 지방 정부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돕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 의회에서 공동체로의 ‘자산 이전(asset transfer)’은 지난 노동당 정부가 2007년 ‘자산을 일하게 만들기(Making Assets Work)’라는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던 정책이며, 현재의 (보수당) 정부로부터도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공동체를 통해 단지 돈을 모으는 것뿐 아니라, 공동체의 의지와 창조력을 통해 공공건물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

리즈(Leeds)시의 마을 헤딩리(Headingley)에서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리즈 시 의회에서도 방치해두었던 오래된 학교가 변화했다. 허트(Heart)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위한 편의시설과 카페를 갖춘 현대적이고 산뜻한 예술 및 기업 센터로 거듭난 것이다. 최근 로칼리티(Localcity, 토지와 건물의 공공소유를 주장하는 런던의 시민단체)가 주최한 공동체 소유의 시민 건물에 관한 토론회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헵덴 브릿지(Hebden Bridge)의 작은 마을 페닌(Pennine)과 리버풀(Liverpool)의 마을 톡스테스(Toxteth)에서도 공동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두 마을에서는 버려져있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마을회관을 이제 마을 공동체가 소유하고 관리한다.

허트의 모기업인 헤딩리개발신탁(Headingley Development Trust)의 회장 레슬리 제프리(Lesley Jeffries)는 낡은 학교의 소유권을 시의회로부터 가져오기까지 힘겨운 5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회고했다. 헤딩리개발신탁은 로칼리티와 코오퍼러티브스 유케이(Cooperatives UK, 영국 최대의 생활협동조합)에 모두 속해 있으며, 활발한 활동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분야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는 1000명의 회원이 있으며 각각 5파운드의 회비를 낸다.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허트의 존재를 (더 강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제프리는 말한다. “회원 조직이 된다는 것은 강력한 소속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슬프게도 사람들은 지방 정부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지는 않는다.”

또한 그녀는 헤딩리개발신탁이 헤딩리 주민들에게 공동체로서의 자부심을 일깨운다고 말한다. 한 때 헤딩리에서는 다양한 (외부) 사람들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했다. 이는 반사회적 행태의 증가로 이어졌다. “헤딩리는 고비를 넘어섰다. 아직 위기를 벗어난 것





은 아니지만, 마을에 기쁨이 다시 찾아오고 있다.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있다.” 라고 그녀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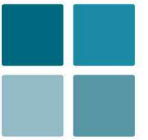
재산세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지방 의회들에서는 이런 흐름에 우호적이기도 했지만, 대체로 성공적인 자산 이전을 가능하게 했던 힘은 공동체 바닥에서부터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은, 자원이 부족하지만 신뢰는 돈독한 공동체의 사람들 스스로가 문제가 되는 건물의 관리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또 있다. 19세기 후반에 발달한 지방 정부는 공공건물의 소유권에 대해 민주주의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했다. 헤딩리에서 만들어진 공동체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체 소유제도가 (건물에 대한) 민주주의적 책임을 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이 적절하게 나눠 줄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자산 이전과 관련하여 로칼리티의 수석 관리자인 안네마리 네일러(Annemarie Naylor)는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그녀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 공공 건물이 관리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알고 있다. 때문에 그녀는 의회가 시의 자산을 하나의 이익단체나 종교집단과 같은 조직, 다시 말해 개방성이 떨어지는 단체에 넘겨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이 같은 정책적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미 자산 이전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영국 의회의 소수 의원들을 칭찬했다. 그녀는 성공적인 자산 이전이란 결국 공공 이익을 위해 자산을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협동조합 컨설턴트이자 코오퍼티브스 유케이의 공동체공유사업단(Community Shares Unit)의 고문인 짐 브라운(Jim Brown)은 자산 이전에 참여하고 싶은 조직이라면 자신들이 공동체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권위의 문제이다. 지방 정부가 당신에게 자산을 이전하도록 설득하려면, 당신은 (주민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회원조직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는 또한 지방 선거에서 투표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만큼 많은 주민들이 회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더불어 지방 의원과 관료들은 하루 빨리 이러한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브라운은 또한 모두에게 열려 있는 회원가입의 개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협동조합의 일곱 번째 원칙 중 첫 번째이기도 하다. 물론 자산 이전과 관련된 모든 공동체들이 협동조합 운동의 일환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못하겠지만, 코오퍼티브스 유케이의 보고서에 의하면 자산 이전을 맡은 공동체로 인해 늘어나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공동체를 통한 자산 관리가 가지는 또 하나 장점은 회원들로부터 자본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헤딩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낡은 학교를 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총 100만 파운드였는데, 개발신탁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걷은 자본금이 10만 파운드를 넘었다. 같은 방법으로 리즈 서부의 마을에서는 지역의 수영장 운영을 맡은 브람블리 배스(Bramley Bath)라는 단체가 시의회로부터 자산 이전을 받았다.

공동체가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지자들로부터 돈을 모으는 과정은 조직을 진정한 주민의 대표체로 만들어 줌으로써 신뢰를 높인다. 하지만 앞서 제프리가 명확히 지적한 것처럼, 자산 이전이 공공 건물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협동조합을 잘 만드는 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관리구조와 책임감이 담보되도록 도입 초기부터 노력해야 한다. 그녀는 허트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도 이곳이 공동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보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제 “우리는 젊은 세대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고 (다음 목표를) 밝혔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83.138.163.233/en/articles/social-enterprise-network/2013/jan/17/community-ownership-public-buildings?CMP=>



---

## 퀘벡 상티에 2006년 선언, “사회적 경제는 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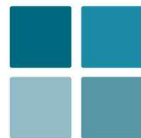
퀘벡 사회적 연대 경제 대표회담 2006년 선언, 사회적 연대 경제 대표회담

2013.06.19 |

이수연\_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mailto:soo@saesayon.org)

---

이런 성과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한 결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성장은 너무나도 빈번하게 빈곤과 사회적, 지리적 불평등을 만들어 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역자의 글 ◀

캐나다의 퀘벡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협동조합이 가장 발전한 곳이다. 3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존재하며, 조합원은 880만 명을 넘는다. 퀘벡 전체 인구가 800만 명 정도인데, 협동조합 조합원 수가 이보다 많다.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협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7만 8000여 개에 이르며, 연간 매출은 180억 달러, 자산은 1000억 달러이다.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는 퀘벡 주 전체 경제의 8~10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6)</sup>

퀘벡의 사회적 경제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상티에(Chantier)이다. 상티에는 퀘벡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연합체로 1995년에 설립되었다. 당시 캐나다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었고, 퀘벡 역시 12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로 애를 먹고 있었다. 이에 1996년 상티에는 퀘벡 주정부와 협력하여 지역경제의 대안을 찾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논하기 위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대학과 연구자들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대표회담을 개최한다.

그 결과 <자, 연대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탄생했고, 여기에는 퀘벡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부터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까지 담기게 된다. 주정부는 이 보고서를 받아들였고 이후 각종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면서 경제위기를 타개했다.

연합체에서 출발한 상티에는 현재 퀘벡의 사회적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상설기관으로 자리잡았으며, 퀘벡은 주정부와 협력하면서도 민간이 주도하여 사회적 경제를 통해 지역개발을 이루어낸 대표적 사례로 꼽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퀘벡은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서울시나 우리 정부가 배울 점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1996년 대표회담은 퀘벡의 수많은 단체와 조직과 시민들이 모여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지역의 발전 방향을 사회적 경제로 합의한 회의였다. 이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10년 후인 2006년에 열린 대표회담은 그간 사회적 경제의 성과를 확인하고, 자신들의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자부하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을 밝히면서, 시야를 퀘벡 내부에서 전세계로 돌리고 있다. 더불어 소비, 노동, 투자, 생산의 모든 면에서 연대를 강화할 것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6) 정태인 외, <협동의 경제학>, 2013, 레디앙



이 선언 외에도 사회적 경제의 발전 과정에 따라 공공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등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들이 해를 달리하여 발표되고 있다. 앞으로 상티에의 선언과 보고서들을 차근차근 소개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은 2006년 대표회담의 선언문을 번역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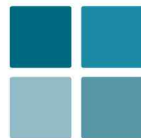
### 퀘백 사회적 연대 경제 대표회담 2006년 선언 (2006 DECLARATION)

2006년 11월 17일  
사회적 연대 경제 대표회담

“사회적 연대 경제 대표회담(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ummit)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 주체들, 다시 말해 다양한 문화운동, 환경운동, 사회운동, 노동조합, 국제 연대단체와 지역개발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협동조합, 공제운동, 결사체들은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사회적 연대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자부심과 결의를 가지고 실천해 나갈 것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우리는 퀘백 주 내에서 뿐 아니라 밖에서까지 그 누구도 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근거하여 사회적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 및 연대체들의 성과와 실적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존하는 사회적 경제 방식을 강화했고, 특히 지난 10년 동안에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는 강화되었고, 새로운 부문들이 출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 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원했으며, 동시에 사회적 배제의 해소, 대중의 참여 및 사회적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선해나가고 창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참가도 높아졌습니다. 경제에서 여성이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한 결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성장은 너무나도 빈번하게 빈곤과 사회적, 지리적 불평등을 만들어 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지업(협동조합과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공동체적 기업을 의미, 사주나 주주가 소유하는 일반적인 기업과 구분하기 위한 표현 - 역자 주)만이 경제의 민주화에 공헌한 것은 아닙니다. 책임 있는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 경제발전에서 노동자의 기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공공정책, 책임 있는 소비관행,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확실히 사회적 경제는 만연한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이며, 보다 민주적인 연대를 기반으로 한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더 공정하고 평등한 세계를 건설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회적 연대 경제는 다양한 부문에서 많이 그리고 튼튼하게 확립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위치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과 부의 창출은 퀘백 주의 경제에서 주요 현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소비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제적 목적과 과정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성공에 더하여 우리는 우리사회가 유통, 제조, 소비에서의 관행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퀘백 경제가 세계경제와 통합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모든 방면에서 평등과 공정을 추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퀘백의 모든 시민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긴급한 문제에 대해 단순히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연대에 기반한 경제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에 함께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사회적 연대 경제의 주체이면서 연대체인 우리들은 퀘백의 지속가능한 발전, 나아가 우리의 연대를 통해 세계 다른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을 결의합니다.

우리는 또한 경제활동을 평가할 때 재무적 결과만을 고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재무적 결과와 함께 사회적, 환경적 결과를 고려하는 3차원 평가방식으로 이행할 것을 정책 결정자들과 정부 대표들에게 요구합니다.

현재의 발전 모델은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빈부 간, 지방 간, 국가 간의 격



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발전 모델을 변혁시켜야 한다는 커다란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지속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캐나다 전역과 북미 대륙, 그리고 국제적으로 사회적 연대 경제의 주요한 부문 간의 새로운 연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향후 10년 동안 다양한 과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를 집중할 것입니다. 동시에 퀘백 주의 모든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고자 합니다.

**• 연대하여 사업한다 :**

이를 위해

- 조직의 사명이 우리 운동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과제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인식하고 그렇게 되도록 유지 발전시킨다.
- 우리의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네트워크 내부와 외부에서 소통을 강화한다.
-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와 어긋나지 않는 판매 및 관리관행을 지원한다.
- 젊은이, 선주민, 장애인 및 이민자들이 사회에 통합되도록 한다.
- 민주적 운영과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반영한 공공정책을 분명히 제시하는 정부와 연계한다.

**• 연대하여 노동한다 :**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를 위해

-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 및 공동체 발전을 위한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조직들에 대한 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
- 노동조건에 관한 논의할 수 있는 전국적인 태스크포스팀을 만든다.
- 노동자 인식과 능력 향상을 추진한다.
-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늘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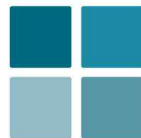
**• 연대하여 투자한다 :**

이를 위해

- 자본 개발과 연대금융에 존재하는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만든다.
- 사용할 수 있는 연대금융 수단을 서로 연결하여 강화시킨다.
- 사회적으로 유용한 투자를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을 개혁한다.

**• 연대의 영역을 확장한다 :**

이를 위해



퀘벡 상티에 2006년 선언, “사회적 경제는 옳았다!” …… 이수연

- 퀘벡 주의 전 지역에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과 금융수단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제공한다.
- 지역 네트워크가 필요한 기술적, 재무적 수단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치가들에게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기업과 단체들에게 이용가능한 자원들의 통합과 연결이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시킨다.

•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한다 :**

이를 위해

- 책임 있는 소비 주체들 사이에 상승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적, 환경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도록 유도한다.
- 책임 있는 소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이를 인지하도록 한다.
- 사회적 경제가 책임 있는 소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린다.

• **국제적으로 연대한다 :**

이를 위해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연대체들과 함께 대중을 결집한다.
- 우리 정부가 위원회를 꾸리도록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 평등한 위치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연대체들을 지원한다.
- 패자가 없는 세계체제를 만들어 가는데에 시민사회와 사회적 연대 경제의 완전한 참가가 보장되도록 북미대륙 및 대륙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지난 10년 동안 퀘벡의 사회적 연대 경제는 크게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성과는 미약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수없이 많습니다. 사회적 연대 경제의 발전은 지역 규모의 생산과 소비, 노동자의 기여와 사회적 의식이 있는 투자가의 연대를 끌어내는 전반적 차원의 관점을 갖지 않고는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연대 경제는 전 사회가 하나되어 움직이지 않는 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대표회담의 결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발전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연대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그것이 퀘벡과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2006년 11월 17일 몬트리올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chantier.qc.ca/userImgs/documents/CLevesque/sitechantierdocuments/declarationsommetang2006.pdf>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 세계경제 침체, 다양한 대안들

2013.08.08

[www.saesayon.org](http://www.saesayon.org)

우리 사회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진보적 정책 자산을 늘려나가는  
새사연의 [잇;북]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

[www.saesayon.org](http://www.saesayon.org)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